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개혁을 위한 정치경제적 기반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3) 한국통신 민영화논의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 인수를 계기로 쟁점이 되고 있는 한국통신 민영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6월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0년 말까지 총 주식의 약15%(신주 10%, 구주 5%)를 해외매각(구주 1743만주/신주 3469만주)하고 총 주식의 약 10%를 국내 매각(구주 5203만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민영화 특별법을 통해 동일인 소유한도를 15%로 확대하였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현행 33%의 외국인 주식소유한도를 49%까지 확대할 예정이다.[20]

현재 정부는 사업분리 또는 지역간 분리를 통한 민영화방안을 연구 중인데 이것은 시내 기간망을 분리하여 여타 서비스로부터 독립, 매각하는 방안으로서 하나로통신이 경쟁력을 갖는 2001년 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을 제1지역으로, 그 밖의 지역을 제 2지역으로 분할하여 매각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분리에 따르는 비용은 우선 한국통신이 출자한 자회사 및 관계사 지분 정리를 통해 일차 조달하고 분리 후 장거리 통신망의 민영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부족분을 조달하는 방안 등이 강구 중이다.

이러한 민영화방침의 논거로서 기획예산처에서는 공기업형태일 경우 이른바 주인-대리인관계가 납세자(명목적 주인)-정치권력-행정부-공기업사장-중간관리층 등 복잡하여 관리비용이 높다는 것을 들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한통의 경영상태는 연 매출 10조원에 올 상반기 약 6,000억원(작년 대비 약 400% 성장)의 당기순이익(연 목표 1조 2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크게

20)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IMT200 사업권과 디지털위성방송 사업권의 매각, 파워컴매각, 한전 매각, 한통 지분매각 등을 통해 40조원 규모의 긴급 공적 자금을 마련하려 한다고 보도하면서 한통의 국내 인수 대상으로 삼성그룹이 가장 유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일신문 6월 2일자.

나쁘지 않다. 한국통신은 2000년 상반기 매출이 8.5% 증가한 5조 936억원, 순이익은 작년 상반기 대비 463% 늘어난 5,962억원을 실현하여 2000년 반기순이익 상위 4위 기업에 올라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개선을 통해 더 높은 경영효율을 달성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핵심을 소유형태의 민영화에서 찾기보다는 정치권과 관료 등으로 이어져온 관권적 내부 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 전문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반론이다.

예컨대 퇴역 관료나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이사회 제도의 문제점, 예산편성 지침 등을 통한 지나친 행정규제 등으로 인하여 과감한 재투자가 어렵고, 그자체 공공정책의 일환이긴 하지만, 지난해 약 3조원의 자산매각이 정부재원으로 확보된 데서도 보듯이 한통의 투자재원이 정부의 자원조달과 통신정책으로 활용(이동통신 프리텔·한솔엠닷컴 인수, 디지털 위성사업 등) 되고 있는 점 등이 단위기업으로서의 한통의 수익위주 경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한국통신 주요 주주 현황(2000년 현재)

□ 반기순이익 상위 10개사 (단위: 백만원, %)

회 사 명	99년 상반기	2000년 상반기	증감율
삼성전자	1,342,898	3,182,916	137.02
포항제철	683,967	1,326,975	74.01
한국전력	786,754	1,143,355	45.33
한국통신	105,723	596,206	463.93
LG전자	925,777	442,585	흑자감소
SK텔레콤	149,583	370,752	147.86
아남 반도체	139,353	350,144	151.26
현대자동차	110,194	310,363	181.65
삼성SDI	113,826	273,421	140.21
LG 화학	185,858	239,969	29.11

무엇보다도 한통의 분할민영화는 초고속 통신망 조기구축 등 인프라 구축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종합통신사업자의 부재로 인하여 네트워크산업의 전형인 국내 정보통신기술의 종합적 발전을 약화시켜서 외국 통신자본에 대한 기술 및 자본의 종속화가 우려된다. 세계 통신업계는 1980년대 후반의 분할 추세로부터 최근 다시 그 효율성의 저하를 이유로 거대한 국제적 M&A 추세를 보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우리 사주제도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우리 사주 20%로 경영권을 방어하자고 주장하는데 그 현실성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통의 우리 사주는 5%로 배정되어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20%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계산 상으로는 추후 15%까지 우리 사주 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15%의 주식을 1주 당 시가 약10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종업원 수 5만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약 1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를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간 우리사주를 5% 배정하였지만 현재 우리사주 보유현황은 1.1%를 밑돌고 있다.

(4) 철도사업

그간 정부의 철도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왔다. 1989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1993년 1월1일부터 철도를 공사화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시행을 목전에 둔 1992년 12월 철도기반시설 미비를 이유로 들어 공사화계획을 3년 연기하였다. 그러나 다시 1995년 12월 김영삼정권은 철도기반시설 미비와 남북철도 연결사업 등을 이유로 철도공사법을 폐지하고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1998년 3월8일 현 정부는 철도의 민영화방침을 결정하고 2000년 8월 철도민영화에 관한 법안을 마련, 2002년 1월1일부터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2000년 1월1부터 철도청조직을 기업형 조직인 사업본부제로 개편하고 5개 지방청을 폐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철도청은 자체 경영개선 계획에 따라 1995년 말 3만7천여명에 이르는 인원 중 20%에 해당하는 7,307명을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996년부터 1998년에 걸쳐 이 중 3,546명을 이미 감축한

바 있다. 다시 1999년에는 정부의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대통령령을 통해 1,506명을 감축하였다.

정부는 민영화의 논거로 적자누적을 들고 있으나 그간 정부 교통정책이 도로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면서 철도와 관련한 시설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과 아울러 정부 각 부처의 경영개입으로 일관된 책임경영을 전개하기 어려운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인사·조직은 행정자치부가,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정책은 건설교통부가 각각 각종 규제 및 지침을 통해 강제함으로써 전문경영기법에 의한 자율적이며 책임있는 경영을 펼칠 수가 없었다.

일본의 경우 민영화 이후 철도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철도업자의 겸업을 허용함으로써 운송업 외에 부동산업 숙박업 등을 함께 운영하게 하였는데 이들 민간업자들은 종종 철도의 공공성을 무기 삼아 정부를 상대로 각종 담합적 요구를 내놓음으로써 또다른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재벌 등 사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여전히 전근대적 족벌체제에 머물고 있는 한국자본주의의 특성에 비추어 당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민영화만능론)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전문경영체제를 보장하되 철도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철도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일반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감시와 견제체제를 갖추어 참여적 전문책임경영체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기타

이밖에도 정부는 최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어 담배인삼공사의 정부지분 15%를 연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민영화하고 가스공사는 전략적 제휴나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증자한 뒤 2002년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21] 이에 따르면 한국중공업은 전체 지분 가운데 51% 이상을 오는 10월중 국내 건설·플랜트·기계 등 유사 업체에 팔아 민영화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근 액면가 직접공모방식으로 매각을 마친 24%의 주식지분은 당초 예정

21) 한겨레신문, 9월30일자.

대로 11월 하순 상장키로 하였다. 산자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계획에 따르면 11월 주식상장 전까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식의 10 - 15%를 웨스팅하우스와 GE를 상대로 전환사채 방식으로 판매함으로써 두 회사와 전략적 제휴협상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지분 가운데 36% 이상은 제한 경쟁입찰방식으로 국내 업체에 매각하여 지배주주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6. 공공부문 개혁의 과제

공기업 민영화계획과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사주 등 국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또 공기업주식을 국내외 증시에 분산 매각하고 대주주의 지분소유를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공기업이 재벌이나 외국자본의 소유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지분소유 제한과 관련하여 현재 재벌은 투신사 등 재벌 계열 하의 금융기관을 통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은 재벌개혁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금융부문에서의 재벌지배 차단 등 금융구조조정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확보되지 않은 채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이 진행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그 파장은 상당기간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정부 보유의 공기업 주식을 매각하여 증시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금융자산 보유비율은 구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건전한 금융제도 정비는 기업의 자금구조 건전화와 더불어 국민생활의 안정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IMF 등의 요구에 의해 우리 자본시장은, 물론 남미 국가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그 개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기는 하나, 매우 빠른 속도로 외국인에 개방되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 중이기는 하나 아직 실효성 있는 대비책이 구체화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의 롤러코스터장세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를 모방하는 이른바 개미군단의 피해사례는 우리 증권시장의 취약서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 표 : 민영화대상 공기업과 관심 있는 재벌기업>[22]

한국중공업	:	현대 삼성
가스공사	:	삼성 LG SK
한전	:	현대 LG SK
담배인삼공사	:	롯데 제일제당
포철	:	현대 삼성 롯데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의 전제조건으로서 위에서 열거한 재벌개혁, 증시 건전화를 포함한 금융구조조정 등은 어디까지나 이른바 '건전한 자본주의', 혹은 다소간 형용모순으로 들릴 수도 있는 '깨끗한 자본주의'(clean capitalism) 수준의 요구들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자본주의의 특징인 국가 주도의 압축적 축적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전근대적 폐쇄성·연고성 등을 해소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자본주의적 경영의 합리적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그 기본내용이다.

자본주의적 경영의 합리성은 노동자계급의 정치경제적 진출 정도에 따라 노동자경영참여 등 참여적 기업민주주의의 측면을 일정 정도 내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적 생산력발전의 동력인 사적 이윤동기를 전제하는 것이다. 어떤 사회든 성과의 추구, 성취의 추구라는 의미에서의 기업효율원리는 가져야 할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 그 원리는 이윤추구의 원리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일국적 수준을 이미 넘어 국제적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대기업의 사회적 생산 및 분배의 일반화는 '세계화'라는 화두에도 잘 반영되어 있듯이 현대 자본주의의 생산력발전원리가 스스로 사적 관리·사적 통제를 초월하는 사회적 원리와 사회적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생산규모의 거대한 사회화·세계화 속에서 일국 경제 및 세계경제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적 운영(이 양자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을 위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의식이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케인즈주의적 개입국가 혹은 복지국가가 관료주의적 정체성을

22) 이성복, 1999, p.14 참조.

보이고 개성과 창의의 침체를 가져온 것이 일정하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대안을 시장으로의 복귀에서 찾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과도기적 복원이라 하더라도, 역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케인즈주의의 관료주의적 정체로의 편향은 실인즉 케인즈주의 그 자체의 이론적 정치적 본질에 내재해 있는 것이거니와, 독점자본의 재생산에서 체제의 재생산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그 계급적 속성 자체가 안이하고 단기적인 재정정책에의 과도한 의존과 과잉생산 경향의 과속화 등 만성적 인플레이션을 항상화시킴으로써 체제의 탄력성을 이완시켜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공기업민영화 등 시장원리로의 복귀가 사회의 일부 독점자본 분파에게는 일시적인 축적재개의 숨통을 트여줬을지라도 체제 전체의 탄력성 회복과는 거리가 멀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전체에 '20 대 80의 사회'를 야기하고 사회통합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물론 한국자본주의와 같이 합리적인 근대 자본주의의 운영틀 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전근대적인 관료주의와 국가독점적 정경유착이 혼융되어있는 사회에서는 IMF 등 국제경제기구가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자본 측 입장에서의 합리성조차 거의 혁명에 가까운 사회변동을 거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현정부 안팎의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인사들이 신자유주의적 담론을 내걸고 계급간 정치지형을 가늠해 가면서 때로는 뒤죽박죽의 논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일관성이 없는 재벌구조 개선이며 금융구조조정을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데에는 그들의 시장주의적 편견 외에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의 힘관계가 있음을 일응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합리적 게임룰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개량적인 수준의 개혁조차도 상술한 한국의 특수한 정치경제적 지형을 감안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유주의적 담론이 그러하듯 공공성은 논리적으로는 민영 하에서도 공중의 민주적 경영참여와 견제 하에 확보될 수도 있을 것이나, 현대 자본주의의 고도로 사회화된 생산력발전의 특성 상, 특히 현단계 한국자본주의의 실정 상 '민간자본'은 전력산업의 특성상 재벌계열 대자본이거나 국제 독점대자본일 것이다. 따라서 공공성의 확보는 민간자본의 집중성이나 해외자본에 대한 통제능력 등의 면에서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따라서 정부가 소유지분을 통해 궁극적인 통제권을 갖되, 전문경영인의 자율적인 책임경영 보장, 그리고 당해 노동자와 공중, 민간 전문가 등의 실질

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현단계 한국 자본주의가 보여주는 이미 거대하게 사회화된 사회적 생산력 수준을 생각할 때 개혁의 방향은 시장주의적 원리로는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 동력은 흔히 말하는 시민사회적 동력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면 요구과제로서 전문가적 책임경영이나 혹은 민주적 참여경영을 내걸고 독립된 이사회며 사외이사, 노조를 비롯한 공·사기업 이해관계자의 경영참여 등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을 요구할 때에도 그러한 요구강령은 현재의 사회적 생산력 발전경향에 상응하는 중장기적 과제 속에 위치 지워야 할 것이며 이 때 관건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장기적 과제와 당면 요구과제를 연결하고 추구하는 주체 혹은 동력을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관리체제 이후 우리 사회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는 집단별 부문별 이해관계 투쟁은 보수언론에 의해 종종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있거니와 사실상 그것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초보적 인식의 발로일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우리가 말한 동력의 하나의 실마리일 수 있다. 다만, 집단이기주의라는 매도는 그것대로 문제이지만 최근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각 이해관계 집단 혹은 부문운동 내부의 이를테면 '전투적 경제주의'의 경향은 그것대로 또다른 문제이다. 이러한 미시적이고 단견적인 운동은 사실상 그 집단 혹은 부문의 '이기주의'에도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23]

최근 공공부문 개혁이 화두가 되고 관공서마다 고객서비스 창출 운운이 유행어가 되면서 예컨대 일부 구청이나 경찰서에서는 과장급 공무원의 전화인사가 '좋은 하루 되세요' 하는 식으로 세련되어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대사관 앞 집회금지' 등의 개악에 이어 다시 주말 집회 금지 등 집시법 개악을 시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경을 배치하여 폴리스 라인을 정하고 시위대의 여간한 도발에는 최루탄을 쏘지 않는다는 식의 나름으로 세련된 제스처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 제스처가 롯데호텔노조파업에 대한 강제진압과정에서 보듯 한순간

23) 이와 관련하여 한 논자는 '더이상 제 정치세력들이 대중운동조직을 상대로 제로섬게임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세력화와 전선운동의 상호 확대강화라는 문제의식 하에 대중운동, 전선운동 정당운동 전반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회수, '2000년 민중연대투쟁 준비현황과 과제', "민주노동과 대안", 통권 31호, 2000.4-5월. 참조.

에 엄청난 과잉폭력으로 돌변하는 것은 현 정부 하에서 지배집단이 보여줄 수 있는 유화제스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한국자본주의의 폭력적 축적방식의 한계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 각 부문운동의 전문화와 과학화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문화·과학화한 역량의 결집이다. 부문 별로 저마다의 요구가 이해관계 속에 그저 병렬되는 수준의 연대를 넘어 총체적 조감과 공감대 속에 각 부문별 결집이 이루어질 때 재벌개혁, 금융개혁, 공공부문개혁 등 상호 불가분의 구조개혁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차적 과제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공유 하에 스스로 진보의 거점으로서 정치경제 전반의 민주성과 사회적 효율성을 고민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충호, 2000,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실태조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권혜자·강익구·한인임, 1999, "공기업 구조조정의 평가와 사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예산청, 1999, "한국의 재정 : 1999", 매일경제신문사.

김상곤, 1995, '공공부문의 경영합리화와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제1권 제1호, 1995.4.

-----, 1995b, '시민을 위한 한국통신,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민교협 외 "시민의 한국통신 만들기 대토론회" 자료집, 1995.6.7. 명동 YWCA회관 1층 대강당.

-----, 1995c, '통신개방과 한국통신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민교협·학단협 외, "통신개방과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한 공청회", 1995.7.6, 연세대 장기원기념관.

김용렬, 1994, '기업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산업연구원 "실물경제" 제29호, 1994.8.17.

김윤자, 1995, '80년대 신자유주의적 축적', "한신경제과학연구"제2집, 한신대학교 경제과학연구소.

-----, 1998, '국제금융자본과 사회적 통제', "한국사회와 노동운동", 한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1999, '공기업민영화 : 비판과 대안', "진보평론" 제2호, 1999년 겨울호.

-----, 2000, '한국 공공부문의 특징과 개혁과제', "민주노동과 대안" 제32호, 2000.6.,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기연 한중 연구팀, 1998, '한국중공업 민영화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및 비판', 노기연 "민주노동과 대안", 제15호, 1998.12.

----------, 1998, '한국중공업 민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정책대안', 노기연 "민주노동과 대안", 제15호, 1998.12.

노사정위원회, 1998, 공공특위 26차회의록, 1998.10.28.

옥동석, 1997, "한국의 공공부문과 통합재정 범위", 한국조세연구원.

윤미경·박영호, 1998, "공기업 매각방식의 주요유형 :해외매각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만우, 1999, '개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공기업지배구조', 조선일보 후원 공기업학회 춘계 학술대회 "공기업 자율경영과 지배구조" 자료집, 1999.5.28.

이성복, 1999, '공기업민영화의 전개 및 영향 ---한국의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세계화시대의 초국적기업과 공기업민영화", 1999.5.7.

임양택, 1997,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방안---국영기업(한전 및 한통)을 중심으로', 최광·임주형 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IV", 한국조세연구원.

임주형 편, 1997,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I", 한국조세연구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IMF 이후 구조조정의 폐해와 문제점 - 노동조합별 사례를 중심으로", 1999.

한인임, 1998, '서울지하철 구조조정(안) 비판', 노기연 "민주노동과 대안", 제15호, 1998.12.

Cook, P. & Kirkpatrick, C. ed., 1988, Privatisation in Less Developed Countries, Wheatshef Books Ltd.

Vickers, J. & Yarrow, G., 1989, Privatization : An Economic Analysis, Maple-Vail, Inc.

■ 토론 1:

전력산업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력 노동자들의 주장

김채로 (전국전력노동조합 상황실장)

1. 서론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제3세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민중에 대한 자본의 무자비한 착취를 보편화하는 선진 자본의 약육강식의 논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 초국적자본은 화폐자본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생산자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 산업과 식량농업 등 국가의 전략산업까지 장악해 가고 있다. 이러한 반민중적이고 반민족적인 침탈을 막기는커녕 세계적 추세다. IMF다 하며 정책입안자들은 드디어 한국전력과 같이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까지 그들의 손아귀에 넘기려하고 있다.

지난해 전력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설립이후 54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힘겨운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전력관련 6개사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수 차례 대규모 집회는 물론, 천만인 서명운동, 단식, 삭발투쟁과 파업결의 그리고 명동성당 천막농성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양대노총을 위시하여 제 시민 사회 단체를 망라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그야말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인 결과 국회입법을 저지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4.13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언제 유권자를 의식했냐는 듯이 지난 7월 임시국회에 폐기되었던 법률안을 다시 상정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해외자본의 요구에 스스로 종속된 기득권자들만의 잔치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2. 본론

"한국전력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수 개의 작은 전력회사로 나누고 이를 민영화하여 상호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으로 전기요금이 내리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면 총 요소 생산성 및 성장속도 세계 4위, 노동생산성 세계 1위, 99년 국제기준 자산 건전성 평가기준 세계 1위 등을 포함한 각종 지표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평가한 것은 어느 나라 정부인가. 작년 1월 민주당의 박광태 의원이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전력요금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각국의 자료와 함께 제시한 바 있다.

한국전력이 유수한 세계 전력회사와의 경쟁을 뚫고 중국, 필리핀 등의 전력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 등의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그 어디에서도 정부가 주장하는 한전 해체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거대한 전력회사들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의 전력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한전의 경쟁력이 걸림돌이 되므로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라는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전력산업의 분할 매각을 통한 민영화의 경우 발생할 문제점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민영화에 따른 사적독점화 및 국부유출
둘째, 국가동맥의 외국자본 소유로 경제주권 상실
셋째, 환경친화적 경영 불가
넷째, 요금인상으로 인한 영세서민의 전기수용 포기 상황 초래
- 영국 98년 93만 가구가 전기수용 포기
다섯째, 국내 생산품 국제경쟁력 상실로 IMF 탈피 불가
여섯째, 전력공급의 안정성 상실

- 투자 기피로 생산설비 확충 미비(금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 한 학교 및 관공서 전력공급 중단사태의 원인으로 밝혀짐)

일곱째, 북한지역 전력공급 능력 상실로 통일사업 차질

여덟째, 합리적 연료믹스(MIX) 불가로 연료비 지출 증대 등 이루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년간 우리 노동자는 **정리해고도 수용하고 임금반납도 수용**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비리나 비효율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면서도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아픔을 참아왔다. 이제는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차례다.**

최고 경영자를 전문 경영인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여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전력 수요자인 시민과 노동조합이 내부 감시자의 입장으로 중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재편하여야 한다. 그러한 구조조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노조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공기업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한 다음 한전의 구조개편 즉 분할 매각·민영화를 마치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선전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3. 결론

공기업을 개혁할 것인가? 보기 싫으니까 해체할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선택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러한 책임 회피의 자세를 버리고 먼저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TV토론회, 시민 공청회,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경제위기를 이용한 해외자본의 국내 알짜 공기업 사냥에 속수무책인 정부를 믿고 있기에는 유구한 이 나라 역사와 앞날을 생각할 때 도저히 참을 수 없기에 우리 전력노동자들은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24, 25일 한국통신과 연대한 조합간부 선도투쟁을 시작으로 공기업 민영화 저지투쟁은 시작되었다. 10월 8일 양대 노총 소속의 전력, 통신, 철도를 포함한 공공노동자 5만여 명은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및 해

외매각 저지 등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조합원 결의대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이제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총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투쟁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이 나라의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집단이기로 매도당하지 않고 전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제 시민 사회단체는 물론 지식인 학생, 농어민 등 모든 조직이 함께 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며 이 글을 맺는다.

<별첨 자료> 전력산업 구조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2000. 9

전 국 전 력 노 동 조 합
비상대책위원회

Ⅰ. 세계 전력산업 구조개편 현황과 교훈

1. 세계적 추세는 분할·매각이 아니라 경쟁요소 도입이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세계적인 추세는 경쟁 요소 도입이지 민영화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 소유든 공영이든 수직통합 기업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요소'를 도입하는 형태로 전력 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력산업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다.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위험 분산 측면에서 수직통합체제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 **한전 같은 수직통합 독점기업을 해체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편 을 추진한 나라는 아직까지 영국이 유일하다.** 태국도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이들은 긴박한 외화획득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9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한국전력을 서둘러 민영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긴박하지 않다.

◇ 향후 세계 각국의 구조개편 사례를 검토하여 '차분하게' 우리 현실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수직통합 공기업체제는 그대로 둔 채 제한된 범위에서 경쟁을 도입하고, 발전·송전·배전 부문간 회계분리 등의 방법으로 경영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향상을 기하고 있음)나 **북유럽 국가들**(수직통합 국영체제를 다수의 회사로 분리하되 민영화시키지 않고 공기업 체제로 유지)**의 사례를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 가 있다.**

Ⅱ.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점

1. 한국 전력산업은 비효율적인가 ?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의 98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전의 총 요소생산성은 세계 35개 주요 전력회사 중 4위다. 생산성 성장 속도도 4위다. G7 **국가와 우리의 전력산업을 비교하더라도** 종업원 1인당 판매전력량, 부하율, 이용률 등 **경영효율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에서 우리가 모두 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표1> G7국가와 한국의 전력산업 주요지표 비교

구분 \ 국가별		한국 ('98)	일본 ('98)	프랑스 ('97)	미국 ('97)	영국 ('97)	독일 ('97)	캐나다 ('97)	이탈리아 ('97)
종업원1인당 판매전력량	MWh/人	6,902	5,502	3,035	7,770	…	2,572	6,366	2,473
부 하 율	%	74.5	58.3	68.0	61.3	65.6	72.1	65.4	51.8
이 용 율	%	55.7	…	45.6	47.0	51.3	51.9	54.7	37.8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생산액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90년에 1억 1,000만원이었던 것이 연평균 2,500만원 이상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3억 4,500만원이나 되었다.

<표2> 한전 종업원의 부가가치생산액 증가 추이

1인당 부가가치생산액 부가가치액/상시 종업원수(백만원)	'90	'92	'94	'96	'98	'99
	112	148	179	213	270	345

지난해 **정부의 공기업 평가에서 한전은 '매출액 영업이익율', '종업원 1인당 매출생산성' 등 생산성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A+**을 받은 것은 물론 **적정 부채비율(재무구조개선) 분야도 A+**을 획득했다. 99년도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한전이 1위를 차지했다.

◇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배경으로서, 독점공기업 체제로 인한 비효율성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비효율성의 가능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민간 경쟁체제가 공기업 독점체제보다 효율적인가?

□ **민간 경쟁체제의 예상되는 문제점**

- 민간 사업자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등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나?

전기는 여전히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생산적 복지" 의 관점에서도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전기공급 의무'는 국가의 필수 의무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가 구조개편의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에서는 98년에 93만 가구가 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전기를 끊었**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이처럼 고통받고 있는 영국을 과연 공기업 민영화로 성공한 나라라고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다. 그런데, 우리 전력산업이 공기업 독점체제에서 민간 경쟁체제로 갈 경우 영국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전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 민간 경쟁체제가 될 경우의 세계 경쟁력은?

세계 전력시장이 독과점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을 분할·매각할 경우 우리 전력산업은 세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규모의 경제를 상실한 개별 발전회사들은 지금의 한전에 비해 경쟁력 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세계 메이저 전력회사들의 사냥감이 되어 결국은 한국 전력산업 자체 가 외국에 종속될 우려**

가 크다.

□ **검토 의견**

◇ **"독점은 악(惡), 경쟁은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문제**

일반적인 경제원리는 공기업은 사기업 보다, 독점체제는 경쟁체제 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력산업은 자연 독점성이 있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고, 발전 · 송전 · 배전의 수직통합형 체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는 독점체제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 **독점체제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경쟁체제는 아님**

독점체제가 비효율적이라 하더라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독점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i) 유인규제 제도 (incentive regulation)를 도입하거나, (ii) 영업권경매(franchise bidding)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경쟁의 도입은 제3의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유인규제제도란 독점기업이 스스로 경영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동원하는 것으로, 최근 영국에서 활동되고 있는 RPI-X 제도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영업권 경매는 독점적 사업권을 허가하되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경매 에 의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운영권자를 경매에 의해 선발하는 것과 같다. 최근 프랑스를 중심으로 국영기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경영계약제는 변형된 형태의 영업권 경매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비효율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경쟁체제 도입만이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대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3. 한전의 재무구조, 정말 문제 있나?

◇ **현재 한전의 재무상태는 양호하다.**

99년 말 현재 한전의 부채비율은 111.5%다. 이는 외국전력회사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일본은 604% (98년, 9개 전력회사 평균), 미국은 201% (96년, 224개 대규모 민간사업자 평균), 프랑스 전력회사는 256% (97년)이다. S&P가 권고하는 일반 기업의 적정 부채비율 150% 보다 낮고, 금융 감독위원회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200%보다도 훨씬 낮다.

◇ **전략적인 요금인상으로 투자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정부는 한전을 그대로 두면 2008년에는 부채가 약 68조원이 되고, 부채비율도 253%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그 때까지 전기요금을 전혀 인상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것일 뿐이다. **올해부터 2002년까지 3년간 5%씩 요금을 인상하고, 2005년 이후에는 매년 2%씩만 인상한다면 전력설비 투자재원 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고, 한전은 부채비율을 100%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해마다 수 조원 의 이익을 실현하는 초우량 기업이 될 수 있다.**

4. 구조개편 통 전기요금 하락 가능성

(1) 유효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이다.

전력산업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진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총설비 가 충분하여 시장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우면서도 공급안정성에 문제가 없어야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경쟁효과로 인한 전기요금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발전부문 경쟁도입 방안대로라면, 6개 발전회사간 에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설비가 충분치 않아 공급안정성 문제를 고려하면 효율적인 경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인력감축으로 인한 비용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전은 지난 2년간 4,604명을 감원하였고 올해 544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계약직, 촉탁, 청경 등을 제외한 상시 종업원 수가 3만 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7년 전인 1993년의 종업원 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에 지난 7년 동안 전력설비는 2배 증가했다. 따라서 현재 한전의 인력운용이 방만하다고 할 수는 없다. 98년 발전설비 1MW당 종업원수는 영국이 1.13명이고, 한국이 0.74명이었다. 한전이 지난 6월에 발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방향과 필요성] 이라는 자료에도 "더 이상 인력감축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오히려 한전의 발전부문이 6개 회사로 분리되면 임원과 관리직 등이 덩달아 6배로 늘어나 종업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3) 연료비용 절감 가능성도 희박하다

우리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더라도 연료비를 절감할 방법이 거의 없다. 우라늄, 석탄, 석유, 가스 등 대부분의 발전연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처럼 자체적으로 개발할 유전도 없고, 무연탄 개발은 경제성이 전혀 없다. 비싸든 싸든 국제 시세대로 원료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발전회사간에 연료비 경쟁이 어떻게 이뤄지겠는가? 결국 우리 나라의 경우 연료비 절감과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거의 관련 이 없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정부는 "만일 무연탄 대신 유연탄을 사용한다면 1999년 한해에 만 1,76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LNG의 경우에는 장기계약 LNG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0.24%의 요금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내탄을 수입 유연탄으로 대체할 경우에 불을 보듯 뻔한 국내 석탄산업의 파멸이나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장기계약 구매 대신 LNG 의 현물구매 비중을 늘리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계산은 가설에 불과할 따름이다. **오히려 분리된 발전회사들이 현재의 한전보다 가격 협상력이 떨어질 것을 감안하면 연료 구입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5.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부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먼저, 공급측면에서의 하락요인을 분석하면,

'자본비용의 절감'을 얘기하나 민간 회사가 현재의 한전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을 조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만약에 발전소 건설물량 자체를 줄여 자본비용을 절감할 경우에는 전력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고용구조의 합리화' 문제는 앞서 설명한 대로 현재의 한전 조직도 상당히 슬림화되어 있어 민영화되더라도 쉽게 큰 폭으로 이루 어질 수 없다. **다음, 수요측면에서의 하락 요인을 분석하면,** '가격구조 합리화 및 시장가격의 수요관리기능 강화에 따른 비용감소' 를 말하고 있으나, 전기요금 체계의 변화는 요금 인하요인과는 무관한 사안이고, 시장가격에 의해 수요관리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저소득 小수용가들의 희생의 대가로 얻어지는 이익이 될 가능성 이 크다. 민간 회사들에게 수요관리 기능 강화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 이다. 그들의 관심사는 수요 관리가 아니라 수요증가에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

는 송배전 및 판매부문 수선유지비용 절감, R&D 등 공익 부담 절감 등 **기타 비용항목에서도 6-7%의 인하요인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송배전 부분 관리는 구조개편이 되더라도 계속 한전이 소유할 것이기에 이 부문에서 비용절감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구조개편의 효과 로 볼 수 없다. R&D 비용을 절감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요금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게다가 구조개편이 되더라도 개별 민간사업자는 현재 한전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사업 부담금을 고스란히 '기금'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6. 구조개편과 전기요금 문제에 대한 종합 검토

□ 구조개편 후 경쟁 효과로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 정부는 2009년까지 약 11.28%의 전기요금 하락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정부가 말하는 공급측면이나 수요측면의 하락요인은 설득력이 없고,
- 외국에서도 구조개편으로 전기요금이 하락했다고 주장하나 영국, 미국 등의 경우를 보면 구조개편의 효과로 전기요금이 인하된 것이 아니고,
- 우리는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경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인력이나 연료비 측면 등에서 원가절감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오히려 구조개편 추진비용과 디폴트문제 해결 비용, 전력거래비용, 규제비용 등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것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한전을 민영화하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17.5~22.0% 오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 요금인상이 민영화의 전제조건이라면 굳이 민영화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전력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로 평가된다. 국토가 좁아 전력 공급이 용이하고, 인구가 많고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전력사용량이 많고, 향후 15년 내지 20년간은 6~7% 정도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적정 투자 보수율을 보장해 준다면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공기업이 영위한다면 그 과실은 국가와 국민의 것이 된다. 하지만 민간기업이 소유할 경우 그 과실은 소수의 것이 된다. 더욱이 외국인이 소유할 경우에는 우리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투자 보수율 인상, 즉 전기요금 인상이 민영화의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면 굳이 민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면 현재의 한전도 어떤 민간기업 못지 않게 수익률이 높아지고 투자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Ⅳ.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공급 안정성

1. 민간 경쟁체제에서 발전설비가 적기에 충분히 건설될 수 있나?

□ 시장에 의한 전력수급 자동조절을 기대하는 것은 전력산업의 특성을 간과한 낭만적인 기대다.

장기전력수급계획이 한전의 독자적인 예측 또는 소수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수립되었기 때문에 설비의 과(過)·소(小)가 반복되었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금년 1월에 확정·공고된 제5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은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의 주관 하에 각계의 전문가 90여명이 99.3월부터 10개월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전력산업 예측은 각계 전문가들의 오랜 공동연구의 성과물이다. **그러면 민영화 이후 전력수급 예측은 어찌될 것인가?** 정부는 각 발전회사가 시장원리에 따라 판단하므로 더욱 정확한 수급 계획하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개별 민간회사들 자체의 예측 능력이 현재의 산자부보다 더 정확하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시장 가격에 의해 수급이 조절되리라고 보는 것도 전력산업의 특성을 간과한 설명이다. 다른 산업처럼 수개월 내지 1-2년 내에 수급 조절을 위한 설비 확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미국, 영국도 구조개편 이후 민간업자들이 설비증설을 회피하고 있다.

96년에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전력부족' 비상이 걸렸다. (붙임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위기" 참조) 특히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8월초에 날마다 예비전력이 고

갈될 상황에 처하는 등 주민들과 기업들 이 전력부족으로 고통을 겪었다. 미국 신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한 실리콘벨리의 컴퓨터, 인터넷 등 첨단기술 기업들은 전력공급이 갑자기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하였다고 한다. 클린턴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연방기관들에게 전력 소비를 최대 한 줄이라고 긴급지시를 내렸을 정도다. 캘리포니아주의 전력부족은 에어컨 사용 급증 등 단순히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주정부가 전력회사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었던 규제를 자율화하고 전기요금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자 기업들이 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신규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도 구조개편 후 7년만에 예비율이 10%이상 하락하여 지금은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장기적으로 전력 공급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 검토의견

◇ **전력산업은 시장에 의한 자동수급 조절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구조개편 후 전력경쟁시장의 가격신호에 의해 업계가 발전 건설물량 및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게 되므로 공급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전력설비는 다른 재화처럼 수요가 많다고 당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발전소 건설의 경우 초기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건설 및 투자 비 회수에는 최소 5년에서 15년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수요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미리 설비 예비율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을 전력산업의 제1목표로 삼고 있다. **민간 전력회사는 '예비' 전력설비를 충분히 유지하거나 건설할 이유가 없다.** 최소 설비로 필요 전력만 공급하는 것이 최대 이윤 창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0년, 15년 후를 내다보고 조(兆)가 넘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민간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연평균 6~7% 수준의 장기적인 수요성장이 예상되므로 신규 발전소의 건설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실리콘밸리의 성장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경쟁체제 도입 후 전기요금이 상승하여 수익성이 더욱 좋아졌음에도 민간 발전회사들이 설비 신설을 회피하여 전력공급 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 **민간 발전회사는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한전은 정부 신용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장기저리로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정부는 구조개편 후 '사업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발해져 민간 발

전회사도 한전 못지 않게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민영화 후 불확실한 수익가치, 국내 금융기관들의 (담보)대출 관행, 그리고 현재 한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민간 발전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업 금융'을 통해 발전소 건설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한다.

◇ **신규 전원(電源) 입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전소는 일종의 공해유발시설,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이기주의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신규 발전소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인 한전조차 최근에는 신규 발전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회사가 2007년 이후 준공해야 할 신규 발전소 건설 부지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민간 회사들은 수요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수요가 폭증하여 공급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와 한전은 투자비 절감, 전기수요 억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요 관리를 하고 있다.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수요관리 투자비를 확대하고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전력 공급설비 확충계획과 대등한 수준으로 수요관리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민영화되면 수요관리가 어찌될 것인가? 민간 전력회사들은 '수요관리'가 아닌 '수요증대'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래야 높은 가격에 전기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회사간에 치열한 판촉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Ⅴ. 민영화의 문제

1. 국가의 동맥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도 되나?

□ **검토의견**

5개 발전자회사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16조 5,000억원 가량 되지만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 자산규모가 지금보다 최소 4-5배 이상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분을 팔 수 있는 곳은 대기업과 일반개인, 외국자본 등 크게 세군데로 나눠진다. 그러나 **'주인을 찾아준다'는 차원에서 매각대상 0순위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공기업을 사들일 돈이 바닥난 상태이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내세운 조건이 까다로워 발전회사 인수가 쉽지 않다.** "당해 기업의 핵심역량업종

에 해당하도록 하며, 인수자금은 자기 자본 조달을 원칙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전무하다. **설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주요 재벌 및 대기업에게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 공기업의 인수에 참여시키는 것은 財源의 편중문제를 제기**시키게 된다. 그리고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에게 공기업 인수를 허락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일반 국민이나 한전 종업원들이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공기업'인 국민기업으로 이름만 바뀌는 것이어서 '책임경영을 위한 주인 찾아주기' 와는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수십 조에 달할 매각물량을 소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현상태에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발전자회사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외국자본 밖에 없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매각규모가 전체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향후 나머지 3개 발전회사의 지분도 상황 변화에 따라 결국은 외국인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모모세 타다시라는 일본인은 [한국이 그래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18가지 이유]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외자조달에 여념이 없는 한국정부가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같은 공기업까지 외국에 팔겠다고 한다. 달러가 없어서 그런 기업을 판다? 한 마디로 안 되는 일이다. 나라가 망해도 그런 기업들을 파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기업들이 외국에 팔리는 걸 말하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30년 동안 그 기업들을 어떻게 키워왔는데 그걸 외국에 넘긴단 말인가?"** 외국의 식자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욱 심각하게 한국전력의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 **전기를 비싸게 팔기 위한 발전회사간의 담합이 우려된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체 발전소의 평균원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하지만 **구조개편 후에는 해당 시간대에 입찰한 전기 중 가장 비용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각 발전회사는 가급적 발전원가가 비싼 LNG발전소 등이 항상적으로 가동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야 전력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발전회사간에 담합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이 매우 높다. 심지어 발전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전기의 운영을 고의로 중단시킬 가능성조차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방지할 수단이 있는가?

□ **구조개편 후 양수발전기의 수요조절 및 가격완충 기능이 폐기되어 궁극적으로 전기요금이 2배, 3배 이상 인상될 우려가 있다.** 현재 한전은 '經濟給電' 원칙에 따라 심야에는 값싼 발전기의 전력 생산량을 높이고, 첨두시간에는 비싼 발전기의 가동량을 줄이기 위해 3곳의 양수 발전소를 운영 중이고, 3곳을 추가로 건설 중이다. 이들 6개의 양수발전소는 모두 민간 화력회사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제급전보다는 최대이익이 목적인 민간회사 입장에서 는 양수발전기를 가동할 이유가 없다. 양수발전 보다는 LNG발전 등에 의해 한계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야든 첨두시간이든 가스발전기를 가동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 **사적 독점화의 우려가 있다.**

구조개편 후 경쟁이 벌어지면, 발전회사간에 우열이 드러나게 된다.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는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회사는 결국 파산하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될 것이다. 파산할 경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초래되고, 인수합병될 경우 사적 독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방지할 유효한 수단이 없다.

Ⅵ. 구조개편 추진시의 문제점

1. 에너지 안보와 통일대비 문제없나?

□ **검토 의견**

◇ **에너지 안보, 걱정된다.**

IFA자료(1998)에 의하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단행한 국가들은 모두 높은 에너지 자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1990-1996년간의 평균에 따를 때, 미국 80.6%, 영국 102.8%, 노르웨이 445.5%, 스웨덴 61.6%, 브라질 67.3%, 칠레 49.5% 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국가 대부분이 50%이상의 에너지를 자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에서 에너지 수급상의 절대적 애로로 인한 국가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임을 암시하고, 또 이미 에너지 생산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

고 있었으며 구조개편 후 비교적 수월하게 경쟁적 시장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8년 말 에너지수입의존도가 97.1%에 이를 정도로 **에너지 대외 종속성이 심각**하며, 주요발전 연료인 석유, 가스 및 유연탄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1973, 1979)으로 국가 경제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였던 전례나, 1990-1997년 말까지 연평균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9.96%, 동기간 전력소비 증가율이 11.4% 로써 향후에도 계속적인 수요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전력산업을 전적으로 국가의 통제권밖에 맡기는 것은 돌발사태의 위험에 국민경제를 무방비상태로 노출시키는 것으로 심각한 에너지 안보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구조개편 후 유연탄, 천연가스 등 발전연료의 적정한 장기계약물량 확보로 에너지 안보에 지장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민간 회사들은 장기계약구매 보다 현물구매 비중을 높이려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해외자원 개발, 에너지 비축제도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현재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인데 성과는 미진하다. 에너지 비축제도 같은 것이 사기업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될 리 없다.

◇ **민간 경쟁체제로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어렵다.**

통일에 대한 대비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일통일의 전례로 미루어 보면 북한지역 전력시스템의 재건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시장경제가 당장 뿌리내릴 수 없고 구매력 자체가 형성될 수 없는 북한 지역에 민영화된 전력회사가 먼 장래를 위한 투자로서 전력기반시설을 깔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큰 시장잠재력을 이유로 민간회사들의 대북투자를 낙관한다. 하지만 수년 내 이익이 발생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민간의 자금조달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도 같은 동포인 우리 나라 사람이 소유한 회사라면 사정이 좀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소유 회사들은 대북 전력사업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통일에 대비하고 한반도 전체에 사회기반 시설로서 전력설비가 균형있게 설치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체제는 통합운영 공기업체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세계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한전은 앞선 기술력과 높은 사업성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1996년 필리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시설용량 120만kW급 일리한 복합화력 사업은 발전소를 건설, 20년간 운영한 후 필리핀에 넘겨주는 BOT(Build, Operate & Transfer)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전은 이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투자재원을 조달하였는데 이는 국내 최초의 사업금융 사례였다. 1999년 11월에 착공한 이 사업은 높은 투자수익성과 함께 한전의 앞선 기술력과 해외경쟁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필리핀 말라야 화력발전소는 한전의 성능복구 공사를 통해 필리핀 최고 성능의 화력발전소가 되었다. 대만의 포모사 그룹에서 건설중인 마일리아오 화력발전소에는 우리 기술진이 파견되어 시운전과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진산 원자력 발전소 시운전 요원들에게는 우리의 원전 운전기술을 전수했으며 현지에 기술 인력을 파견, 시공 감독과 품질관리 업무까지 맡고 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능력을 투자 없이 기술력만으로 외화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화력부문이 5개 회사로 쪼개져 각각 민영화되면 어찌되겠는가? **군소업체로 전락한 민간 발전회사들은 세계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어렵고, 신용도 떨어져 해외 시장 진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Ⅷ. 결 론

□ 사회적 합의하에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는 중대한 문제다. 사회적 합의없이 추진해서는 또 다른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충격과 혼란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전력산업을 민간 독점체제로 전환해야 할 한전 자체의 필요성은 매우 적다. 경제상황도 한전 같은 거대 공기업을 민영화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의 예를 보더라도 전력산업 분야의 경쟁도입과 민영화가 '성과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시간을 갖고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준비를 거쳐 여건이 성숙된 후에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사업부제, 책임경영제 강화"로 효율성 향상을 기해야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 전력산업의 여건상 구조개편을 하더라도 효율이 향상된다는 보장이 없다. 효율성 향상이 목적이라면 구조개편 보다는 우선 분리회계를 통한 완벽한 사업부제의 운영과 책임경영제의 정착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재벌과 마찬가지로 한전은 전문 경영인에 의한 자율 책임경영을 해본 적이 없다. 소신있고 능력있는 전문가가 한전의 최고경영자가 된다면 책임 경영과 사업부제 운영 등 내부 혁신을 통해 한전의 생산성 향상과 책임경영의 제도화·일반화를 통해 한전의 효율성 향상 여지는 매우 크다. 어쩌면 민간경쟁체제보다 더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구조개편에 앞서 한전의 경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부제와 책임경영을 보장하는 제도적 정치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제반 여건이 성숙된 후에 구조개편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구조개편(민영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전기요금 인상은 민영화의 전제조건이다. 전기요금을 올려서 민영화시키면 결국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특히 해외 자본가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지금도 한전의 주식을 27%나 갖고 있다. 이들이 직접 발전자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할 경우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것이다. 구조개편이 되면 전기요금이 적어도 지금보다 2배 정도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사업자간의 담합이나 사적 독점이 이루어질 경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할 우려도 있다. 그러면, 우리 산업 경쟁력은 어찌 될 것인가? 전기요금이 부담하기 힘든 서민이 수십만, 수백만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토론 2: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
(평가와 전망)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 경과와 노동조합의 대응

윤용중 (한국통신 노동조합 부위원장)

□ 들어가는 말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한 주요 흐름과 그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점, 이에 반대해 온 노동조합의 투쟁과 그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코자 함.

□ 과거의 주요 진행과정

○(주로 미국의 압력에 의한) 통신시장 개방

-89. 8. 6 한-미 제1차 통신협상시작/ 90년 DB·DP의 전면 개방 /통신기기의 표준제정 승인완화 (외국인의 통신기술·장비 참여보장)/조달청, 통신공사의 조달구매 외국인 참여기회 허용

○98년 7월 정부, 공기업 민영화계획 국무회의 의결

○98년 8월 정부,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국무회의 의결

○데이콤의 민영화 과정 참고 (제2 시외전화 사업자 → LG그룹 특혜)

○한국이동통신(KMT)의 민영화 과정 참고
(이동통신사업자→SKT SK그룹 특혜)

○98. 12. 23 한국통신 국내 증시상장→ 9. 5. 26 뉴욕증시에 DR (주식예탁증서) 발행(25억불, 총주식의 15%)

●한국통신 지배주주 현황(2000년)

소유주	정부	외국인	우리사주	기관투자			기 타
				국민연금	현대투신	대투	
비율	58.99%	19.4%	1.1%	5.89%	1.51%	1.39%	15%

□ 현재 추진상황

○2000년 정부지분 33.4%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24.9%) 연내매각

-신주 10%, 구주 5% 해외매각
-국내매각분에 대해서는 삼성그룹이 집중 공세
-현재 매각계획인 한국통신 지분은 전체29.7%로 주당 10만원일 경우 9조원대(공적자금 조성→정치적 의도인 졸속적 공기업민영화)

○2002년 상반기까지 정부지분 33.4% 완전 매각(민영화 완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입법 예고

-외국인 소유한도 33%→49%로 확대 (경영권 외국인 장악 우려)

※현재 한국통신은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 외국인 소유한도가 33%로 제한되어 있음

○한통엠닷컴(구 한솔엠닷컴)을 2001년 6월까지 한통프리텔과 합병 예정

-민영화시 PCS 이동통신 분야 분할매각 우려

○IMT2000사업권자 KT자회사 형식 결정

-민영화시 분할 우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취임이후 한국통신 분사 및 신속매각 발표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을 핵심사업분야만 남기고 모두 분사화(자회사·아웃소싱)후 매각하겠다"고 발표<8.18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

□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핵심문제점

○ 공기업 경영부실 원인이 마치 소유구조의 잘못인양 *책임전가하고 있다.*

-공기업 경영부실의 원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사업자간 접속료 등)와 통제일변도의 편향된 정책이 주요 원인

-정부의 퇴역관료나 정치인의 나눠먹기식 낙하산 인사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감사원 및 국회의 중복감사 등 행정규제

-경영성과가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과다한 정부출연 및 기부금

※한국통신이 정부에 지원한 규모 (단위:억원)

구분		~91	92	93	94	95	96	계
배당금		5,263	1,368	1,231	1,094	1,094	512	10,552
	출연금	4,147	615	1,572	2,069	1,794	2,377	12,574
	기부금	545	114	873	4,436	111	101	6,180

○국민의 전화설비비 및 혈세로 만들어진 연매출 10조에 상반기 6000억원인 당기순이익(연당기순익 목표 1조2000억원)을 낸 국민의 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종사원의 의견수렴이나 국민의 동의 공청회도 없이 *졸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조차, "24조원짜리 공기업의 장래를 결정하는 민영화를 왜 충분한 토론조차 거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일본 NTT의 경우 민영화가 논의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반증

○국내 *통신인프라 구축의 약화*로 국제경쟁력 오히려 약화

-통신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에 연구와 투자필요, 한국통신이 광통신망, 초고속통신망 구축, 인공위성발사, 이동통신 분야 개발 등 과감한 투자로 세계 7대 통신강국으로 발전

-한국통신이 사기업화되면 단기적 이윤에 매몰→ 투자 및 인프라 구축에 소홀 → 이는 외국자본과 기술에 종속되는 결과 초래

○*통신요금 인상 초래* →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약화 및 국민부담 가중

-영국 BT의 민영화 후 5년 동안 통신요금이 3배 가까이 인상

○정부는 민영화가 *효율성을 높이고 세계적* 흐름이라는 주장의 허

구

-그동안 재벌의 방만한 경영으로 부도 및 해체위기(대우그룹, 현대위기 등)
-한국통신은 안정된 경영으로 작년대비 460%의 당기순이익을 냄
-선진국 기간통신사업자는 오히려 국유화 및 대형화 추세

※세계 기간통신사업자 민영화 현황

국가	사업자	민영화현황	외국인소유 제한
영국	BT	정부지주비율0.5% 특별주보유	
독일	Deutsche Telecom	정부지주비율 62~63%(예정)	
이탈리아	Telecom Italia	민영화후 3년간 정부가 황금주보유	
벨기에	Belgacom	정부 50.1%보유	
네델란드	KPN	정부 45% 보유	
룩셈부르크	P&T Luxemburg	국유공사	
미국	AT&T		외국인소유20%제한
일본	NTT		외국인소유20%제한
스웨덴	Telia	100% 국유	
한국	한국통신(KT)	2002년까지 정부지분 0%	

○*분할매각 · 분사화*는 한국통신뿐만이 아니라 한국통신시장을 외국에 잠식당할 것임

-기간통신망과 마케팅을 분할할 경우 분할손경비 1조8000억원~2조6천억원 추정
-현재 세계통신시장은 80년초 분할흐름에서 종합통신사업자로 통합추세

○*자사주(우리사주)*등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의 허구

-정부와 사측은 자사주 및 우리사주 20%로 경영권을 방어할 있다고 하나 이것은 허황된 생각. 그동안 받은 우리사주 5%를 제외하고 15%까지 더 배당이 가능하나 15%의 주식은 1주당 10만씩 약5조원이 재원이 필요하다. 5만명으로 분산해도 1인당 1억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사원중 이런 능력이 되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 실제 그동안 우리사주 5%을 배정했었고 현재 우리사주 보유현황은 1.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는 외국인 및 재벌이 이미 매집했다.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른 한국통신의 종사원 *고용안정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

-영국 BT 민영화이후 평균 1/3의 인원이 감원되었음

□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95년 소위 '한통사태'

○96년 PCS 및 통신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활동

○98년 7월 15~16일 시한부 경고성 파업

-한국통신 해외매각 반대, 재벌매각 반대
-외국인 소유한도(20%이상 반대), 동일인 소유한도(3%이상 반대)

○99년 4월26일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파업(유예)

●2000년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활동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 인수직후 정부의 2002년 상반기까지 완전 민영화 입장표명후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2000년 8월초)

-투쟁기조 : 대정부 직접교섭을 통한 민영화저지 투쟁
-한국통신민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자료배포(8/18 전국지부장회의)
-전국전력노조 오경호 위원장에게 연대투쟁 제의(8월29일)
-대국민 의견광고(8/23 동아일보, 한국일보)
-기획예산처 장관 노동부장관 위원장 면담 (9월초)
-공공연맹 공기업투쟁본부에서 하반기 중심사업으로 공기업 민영화저지 및 예산편성 대정부 직접교섭 요구 투쟁 결정 (9월초)
-"한국통신 민영화 반대"전조합원 리본패용, 교육용리플랫, 유인물 8만부 제작 배포(9/20)
-공기업 민영화저지 공동기자회견(9/24, 서울역)
-공기업 민영화저지 출정식(9/24, 서울역→명동, 한통-전력노조 공동개최, 3000여명참석)
-민영화 반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언론광고(조선, 중앙, 노동일보 등)
-민영화저지 조합간부 선도투쟁 전개(9/25~26, 한양대노숙투쟁→국회 앞 집회→민주당사, 한나라당사 항의방문→과천 종합청사 집회, 관계장관면담→ 한국통신 본사앞 조합간부 결의대회, 500여명 참석)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저지 공공부문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10/8일, 여의도, 한통노조 1만여명 참석, 공공연맹,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노협 등 3만5천여명 참석)

●향후 계획 및 방침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의 확대 개편
-전국전력노조와 연대투쟁 강화 (공동집체교육, 여야 지구당사 방문 등)
-공공연맹 공공노협과 함께 공동투쟁기구 구성 논의
-'공기업 민영화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 구성 논의
-아셈회의 및 국정감사 개최시기 조합간부 선도투쟁 및 여론전 강화
-대국민 광고 및 공청회 대국민 여론전 강화
-전국적 총파업 (12월)

<별첨자료>

※ 민영화가 되면 우리 노동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나?

가. 고용안정 문제: 조합원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

1) 삼성이 한국통신 경영권을 장악한다면 현재의 구조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2만~3만 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정도로 대규모적인 감원은 불을 보듯 뻔함.

2) 타기업이 인수할 경우 현재 구조조정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음성사업분야의 퇴출은 기정사실화 되고, 그에 따른 전력, 전기, 선로 등의 아웃소싱은 급박하게 진전 될 것이다. 또한 데이터 분야의 인원도 5년 내외의 기간을 통해 소위 기존 재벌의 사람으로 대부분 바뀌어 물갈이되는 것이 모든 기업의 사례임.

3) 종종 민영화의 본질이 한국통신 조합원에게 심각한 고용 문제와 연결된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한국통신의 경우 고임금인 종사원 대부분은 저임금의 신규인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

4) 이동통신의 경우 한국통신에서 민영화될 때 원하는 사람은 1,2차에 걸쳐 이동통신으로 옮겨갔으나, 지금 현재 한국통신출신 중 이동통신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임.

5)정부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영국 BT사의 경우 민영화로 인원의 1/3을 삭감했다.

6)거평그룹으로 민영화된 대한 중석은 전세계 제일의 기술을 보유한 흑자기업이었으나 모기업의 지급보증으로 모기업과 함께 동반 부도나서 현재 기술부분만 미국기업이 인수하고 부도처리되어 현재는 단 7명의 직원만 남아 자산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나. 높은 노동강도

1)민영화로 인한 인원삭감은 당연히 높은 노동강도로 나타난다.

2)사기업의 논리인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뽑아낸다는 것은 최대한 단위당 노동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높은 생산목표의 설정과 엄격한 노무관리로 나타난다. → 포커스제도나 현재의 노무관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임.

다. 임금 및 복지의 변화

1) 민영화 초기, 대규모 인원삭감으로 살아남은 종사원에게 임금과 복지는 초기에 상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강도 강화의 일부 대가일 뿐이며, 민영화된 외국기업과 국내 공기업의 경우 점차 임금의 상승은 평균치를 밑도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가 실시될 것이다.
현재 정부의 정책에서 연봉제 실시의 기조는 노동조합의 저항으로 주춤 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외국의 대부분 기업과 주요 재벌 기업은 연봉제가 일반적 현상임을 볼 때 한국통신이 민영화된다면 연봉제 전면적 실시와 이로인한 종사원의 경쟁과 압박, 신분불안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라. 노동조합의 변화

민영화의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은 아마도 노동조합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의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 곧 노동조합의 무력화에 있기에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약화 내지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편 만약 삼성이나 LG가 한국통신의 경영주가 된다면 무노조전략으로 노조 자체가 해체될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 토론 3: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대한 철도 노동조합의 입장

김현중 (전국철도노동조합 기획실장)

Ⅰ. 현황.

1. 철도의 운영은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운영

-1989년 제정한 '철도 공사법'을 1995년 12월에 폐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 노·사 합의를 통한 자체 경영개선을 시행할 수 있는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음.

-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철도경영에 있어서 지금껏 관 주도와 각종 규제의 틀을 벗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국가동맥인 철도의 경영개선을 하자는 법임.

- '국유 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정부의 역할과 운영자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SOC투자, PSO보상, 물가인상에 따른 요금인상 등을 통해 철도의 재정자립기반을 약속하고, 운영자는 철도경영개선을 위하여 자체 개선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토록 하고 있음.

2. 자체경영개선.

- 이에 따라 철도청은 자체 경영개선 계획에 의거 95년 말 3만 7천 여명의 철도청 인원 중 20%에 해당하는 7,307명의 인원을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음.

이 계획에 의거 96년부터 98년까지 3,546명의 인원을 감축하였으며, 철도노동조합은 이 계획에 의거 정부의 지원약속의 이행을 전제로, 인력감축에 합의하여 철도발전을 도모하였음.

반면, 정부는 1999년도에는 정부 조직 개편 및 구조조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일시에 1,506명을 감축·조정한 것은 엄연한 노·사 관계를 부정하는 행위임.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져버리는 것이고, 이후 노·사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임.

- 2000년 1월 1일부터 철도청 조직을 기업형 조직인 '사업본부제'로 개편하고 전국의 5개 지방청을 폐지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음.

3. 정부역할 미비

정부의 교통정책은 도로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 정부의 교통시설 투자 추이 (단위 : %)

구 분	1차계획 (1962-'66)	2차계획 (1967-'71)	3차계획 (1972-'76)	4차계획 (1977-'81)	5차계획 (1982-'86)	6차계획 (1987-'91)
철 도	60.6	28.7	29.4	21.7	12.1	10.1
도 로	17.2	52.0	51.6	47.1	46.7	79.6
항만/항공	22.2	15.5	16.3	15.0	10.6	9.2
지하철	-	3.8	2.7	16.2	30.6	1.1

-철도청(1996)

상대적으로 철도 정책의 소외와 투자저조로 인하여 철도산업이 사양산업화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송 분담률에서도 확연히 증명됩니다.

※운송 분담률(비영업용 포함, 인·km, 톤·km 기준)

		1981	1986	1991	1996	1997
여 객	도로	75.2	74.2	71.5	74.8	
	철도	22.4	18.6	18.9	14.5	15.1
	지하철	1.3	5.7	6.7	6.3	
	해운	0.5	0.4	0.3	0.3	
	항공	0.6	1.1	2.5	4.1	
	계	100.0	100.0	100.0	100.0	
화 물	도로	35.0	43.64	46.9	47.9	
	철도	37.5	27.9	19.6	11.3	11.2
	해운	27.5	28.4	33.4	40.6	
	항공	0.02	0.06	0.11	0.12	
	계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교통신보사, 교통연감

- 이와 같은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철도청의 노·사간 자구적 경영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시 약속한 SOC투자, PSO보상의 미비, 물가인상에 따른 요금인상을 이행하지 않았음.

※공공운행 지원금(PSO) 미지급 현황 (단위 : 억 원)

	소요액				보상액	보상율(%)
	운임요금감면	적자선운영	특수목적	계		
1992	326	345	145	816	0	0
1993	345	714	154	1,213	0	0
1994	391	645	277	1,313	0	0
1995	417	645	201	1,263	459	36.3
1996	425	1,218	102	1,745	675	38.7
1997	517	1,475	106	2,098	944	45.0
1998	709	2,231	108	3,048	996	32.7
1999	792	2,561	112	3,465	331	9.6
2000(계획)	884	2,940	118	3,942	1,516	38.5
계	4,806	12,774	1,323	18,903	4,921	22.31

1992-95년 수치는 1996년 철도청자료, 1996-2000년 수치는 2000년 철도청 자료. 특수목적에는 건널목 운영비, 국가보안목표 시설운영비, 국가특수목적 사업비

- 이러한 결과 뼈를 깎는 자체 경영개선에도 불구하고 철도경영이 만성적인 적자의 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정부가 약속한데로 SOC투자, PSO보상 등이 이루어졌더라면 1998년도 및 1999년도 철도경영은 흑자를 기록하였을 것임.

철도산업에 대한 경영개선에 관해서는 노·사가 공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철도경영적자의 모든 책임을 철도의 운영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만 물어, 민영화만이 철도 경영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로 정책을 변경한 것은 모든 책임을 철도관계 직원과 국민에게 떠넘기는 매우 편의주의적인 발상과 즉흥적인 정책 결정임.

- 이와 관련 철도노동조합은 지난해(1999년) 11월 말에 전체 철도직원을 상대로 철도민영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결과는 응답자 80%가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II. 철도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1. 졸속적인 정책결정

- 정부는 1999년 3월 철도민영화정책을 결정하고 같은 해 9월에 민영화방안에 대하여 삼일 회계 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음.

- 그러나 올바른 정책결정 과정은 철도민영화 정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먼저 실시한 후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는 것임.

- 철도민영화 정책을 결정하는데는 98년 11월부터 99년 2월 중순까지 불과 3~4개월간의 정부 각 부처의 경영진단 결과에 의거, 99년 3월 민영화 정책을 결정하였음.

이와 같이 국토의 대동맥인 철도산업에 관한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단기간 내에 결정한 것은 정책결정과정의 중대한 흠결이며 이는 국민의 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부의 정책 결정이 얼마나 졸속적인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음.

2. 정권에 따라 변경되는 철도정책

철도정책은 국가의 중요한 교통정책으로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수립되어야 하나 각 정권마다 한건주의에 기초한 즉흥적인 정책변경을 하여왔음.

-제6공화국.
1989년 철도 공사법 제정 , 1993년 1월 1일부터 철도공사화 계획.
1992년 12월 철도기반시설 미비를 이유로 93년 1월 1일부터의 철도 공사화 계획을 3년 연기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공사화하기로 하였음.

- 문민정부.

1995년 12월 철도기반시설 미비 및 남북 철도 연결사업 등을 이유로 철도 공사법을 폐지하고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1996년 1월 1일부터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철도 운영.

- 국민의 정부.

1999년 3월 8일 철도민영화 방침 결정, 2000년 8월 철도 민영화에 관한 법률 마련 예정.

2002년 1월 1일부터 철도 민영화 계획.

이와 같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철도 정책을 수시로 변경하였는데, 철도정책은 정부의 구조조정 또는 개혁차원에서 변경해서는 안되며 공공성을 기초로한 국가의 장기적인 교통정책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함.

3. 철도요금 인상 , 물류비 증가, 공공성 포기

정부의 철도민영화방안을 보면 정부의 역할과 철도회사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즉 정부는 SOC투자, PSO보상, 건설, 유지보수 등을 하고 철도회사는 여객·화물수송 및 차량정비 등 경영에만 전념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도 정부의 역할이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철도민영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것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정책으로 인식하기가 어려움.

- 이러한 면에서 민영화 이후 정부의 재정사정 등에 의해 정부역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철도 운영회사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철도 운영회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철도 요금 인상, 안전시설 투자 소홀, 적자선 폐지 및 운행축소, 인원감축 등을 통해 공공성과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와 같은 현상으로 물류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국제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민경제의 부담을 가져올 것임.

4. 퇴직 비용 등 막대한 민영화 전환 비용의 국민부담

- 민영화에 따른 직원의 퇴직 비용 4천억을 비롯하여 전체 8조 7천억에 이르는 전환비용의 정부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국민 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임.

5. 국제 환경 및 남북 문제

- 외국의 철도민영화가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음에도 지정학적으로 열강의 이해 관계가 교차되고 있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인 철도를 민영화하는 것은 안보 및 전략상으로 타당치 않음.

특히 최근 화해적인 분위기에 따라 남북 철도망 연결사업이 국가적인 주요 현안사업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철도운영은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6. 환경문제

철도산업의 경우 접근성이나 자유성과 같은 측면에서는 도로교통보다 제약이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단위 수송량 당 CO2 배출량이 승용차에 비해 45%, 화물차에 비해서는 불과 20%에 불과한 환경친화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 국가에서 육성발전 시켜야 할 중추 산업이다.

7.기타

일본의 경우 철도산업이 민영화된 이후 정부의 보조금의 증가는 물론 겸업을 통해 운영회사의 이윤을 보장하였음.

겸업이 가능한 민영회사는 철도산업과 관련 있는 운송업을 비롯하여 부동산업 및 숙박업 등을 운영하게되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음.

이와 함께 민영철도회사는 사기업의 특성상 이윤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담보로 각종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압력단체로 성장할 것임.

III. 우리의 입장 및 요구.

위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해(1999년) 11월 말에 전체 철도직원을 상대로 철도민영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결과는 응답자 80%가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대 이유로 고용불안의 개인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철도 민영화로 인하여 국민부담의 증가와, 이윤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성격상 안전시설의 투자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공공성을 져버리는 산간오지의 적자선 운영에 관한 문제 등의 이유였음.

결국 철도 민영화반대는 직원의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적 입장에서 공공성과 안전성 등을 염려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님이 증명됨.

따라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산업의 민영화에 관해 어떠한 경우라도 묵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철도민영화 정책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3만 철도조합원과 국민의 결집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 철도노동조합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현재 '국유 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정신에 충실하여 공무원 신분으로서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경영간섭 등으로 인하여 철도 경영자율성이 훼손되고 있음. 공무원 체계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정부의 간섭배제와 특례법의 이행의 강제성 부여)과 각종 규제 및 지침 등의 철폐(인사·조직-행정자치부, 예산-기획예산처, 정책-건교부 등).

2. 철도를 책임 기관화하여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업형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 신설.

3.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정부의 약속이행(시설·장비의 현대화, 운임의 적정선 확보, 각종 사회비용 정부 부담 등의 선행) 등의 강행 제도 신설.

4. 철도정책의 결정 및 투명 경영과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노조, 시민 ,학계 등으로 구성된 시민 단체 감시체계 구축 등의 제도 도입을 제시함.

단, 철도 운영 체계를 변경해야 한다면 그 논의 시기는 경부, 호남, 동서 고속철도 완공 등 철도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타 교통수단(도로, 항공)과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송 분담률이 적어도 30% 이상 될 때일 것임.

※ 참 고 자 료

□ 정부의 철도 민영화정책에 대한 철도노동조합의 대응 경과 및

계획

- 1999년 3월 11일 진념 기획 예산 위원장 방문, 철도민영화의 문제점 제시
- 1999년 3월 21일 주요 일간지에 민영화 반대 성명서 게재
- 1999년 3월 24일 전국의 주요 역사에 민영화 반대 현수막 게출
- 1999년 5월 26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결의문 채택
- 1999년 7월 29일 전국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민영화반대 투쟁에 대한 결의
- 1999년 9월 29일 철도 민영화 대책위원회 구성
- 1999년 11월 30일 철도 민영화에 관한 전체 직원의 설문조사 실시(80%반대)
- 1999년 11월 30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및 고려대 경제학과 김균 교수 등의 철도 민영화에 관한 대응방안 용역의뢰
- 2000년 3월 7일 전국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민영화 대책위원회를 민영화 반대 투쟁위원회로 전환
- 2000년 3월 31일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 총파업 선포식 및 결의대회(기자회견 및 조합 위원장 삭발)
- 2000년 4월 2일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 부산역 집회(부산지방본부 위원장 삭발 투쟁)
- 2000년 4월 23일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 광주역 집회(순천지방본부 위원장 삭발 투쟁)
- 2000년 5월 14일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 영주역 집회(영주지방본부 위원장 삭발 투쟁)
- 2000년 5월 15일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 발대식
- 2000년 5월 16일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 건교부 앞 집회
- 2000년 5월 17일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 기획예산처 앞 집회
- 2000년 5월 19일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 정부공청회 참석, 노동조합의 반대 입장 표명
- 2000년 6월 21일 철도산업 민영화 대응방안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
- 2000년 6월 21~23일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 전국 지부장 수련회 실시

- 2000년 6월 27일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 대 국민 토론회 개최
- 2000년 7월 3~7일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 전국 지부임원 수련회 예정
- 2000년 7월 11일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 서울역 집회(노총 및 산별연대)
- 2000년 8월,9월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집회
- 2000년 10월~12월 노총 및 각 산별과 연대하여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 총파업투쟁

-거대재벌탄생

일본의 경우 철도산업이 민영화된 이후 정부의 보조금의 증가는 물론 겸업을 통해 운영회사의 이윤을 보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철도만의 경영을 통해 적자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에서와 같은 겸업을 허용할 것이다.

결국 철도운영자에게 겸업을 허용하는 것은 철도사업을 통한 다른 산업을 잠식하게 되어 새로운 거대 재벌이 탄생할 것이다.

-동종산업의 몰락.

겸업이 가능한 사철은 철도산업과 관련 있는 운송업을 비롯하여 부동산업 및 숙박업 등을 흡수할 것임.

결국 이와 같은 현상은 동종산업과 관련 영세업체의 동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임.

-거대 압력단체로 성장.

이와 함께 새로운 거대 집단화된 민영철도회사는 사기업의 특성상 이윤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담보로 각종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압력단체로 성장할 것임.

■ 토론 4:

체신 부문의 구조조정과 공공성

김용백 (전국체신노동조합 정책국장)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추진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대 국민 보편적 서비스 기관인 우정사업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IMF를 맞아 정부는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공무원 봉급을 삭감하고 정년단축과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2002년까지 8500명을 감축하기로 하는 등 종사원들의 생존권을 박탈시키는데 혈안이 되어왔습니다. 이는 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우편소통을 해온 우리조합원들과 가족들에게는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국가경쟁력 재고라는 미명 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만 이처럼 고통을 전담시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짓입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우정사업 분야의 '98 현안대비 25%인 8500명의 인력감축안은 국가가 국민에게 서비스해야 하는 공공의 의무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족한 일손으로 종사원들은 고통받고 있으며, 국민들은 국가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임시직 대체 사업위주의 우편정책에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의 근거가 되는 우편법 제1조에는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업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성을 중시하는 우정사업이 116년이란 장구한 역사 속에서도 변함 없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한결같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온 우리 종사원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기 때문이며,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저렴한 요금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실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우정사업의 경우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존재하는 한 경쟁력이 뒤쳐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수익이 떨어진다고 하여 산골 오지와 도서 벽지 등의 우편물 등 각종통신서비스를 중단한다면 시골은 암흑과 같은 통신 두절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적 가치는 단순한 상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공공가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정사업이 오랫동안 중시해온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을 중시할 때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는 멀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국가와 서비스 이용자로의 국민과의 괴리감으로 우정사업은 제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우정사업 경영평가를 시행한 이후 우정사업의 수익성은 많이 향상된 반면 공공성은 많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성과를 앞세운 정부의 공공성 포기 정책 이후 종사원들은 실적을 앞세운 목표할당에 혹사당하고 있고 국민들은 서비스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많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국적 네트워크로서 각 읍·면마다 우체국을 설치 운영해 왔으나 대부분의 농어촌의 우체국에서는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수익성을 앞세우고, 경영을 중시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시골의 각 우체국들은 폐국 및 인력감축에 대한 압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곤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체국이 보편적 서비스를 포기하고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기업성을 강조하다보면 국가가 수행해야 될 공공적 가치는 떨어지고 종사원들의 사기도 저하되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의 질이 저하됨으로써 우정사업이 국가전체에 미치는 사회적 효용가치는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신뢰받는 우정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기능직 위주의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이제부터라도 우정사업 서비스 자체가 갖는 공공성을 배제하지 않고 우정사업 본연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공의 이익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국기기관으로서 우체국은 보편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인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변화되어 종사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국가경제 및 국민편익에 긴하는 공공서비스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는 왜 인력감축에 반대하는가?

정부는 IMF 체제이후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을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희생양으로 삼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우선 98년부터 인상키로 되어있던 3%의 봉급인상분을 우리의 동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반납시켰고 이미 회계연도가 시작된 98년초에 들어서 12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삭감하여 공무원 특히 하위직공무원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이어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하면서 6급 이하 하위직에게 허용하던 3년 범위내의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그동안 정년연장 혜택을 누리던 조합원들을 조기에 퇴직하도록 강제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난해 2천명의 조합원이 정든 직장을 떠나야 했다.

게다가 금년에 또다시 250%의 체력단련비를 삭감하여 하위직공무원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정부는 실상이 이러함에도 98년초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한데 이어 99년3월 제2차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정보통신부를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처 등과 통폐합하기로 하고 우정사업을 별도로 책임운영기관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우리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현행대로 정통부를 존치시키기로 확정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우정사업을 책임운영기관화하는 대신 정통부 소속기관화하기로 하여 우정사업본부(1급)를 신설, 정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우정국과 체신금융국을 산하에 두기로 하고 우체국 현업에 종사하는 7천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한 방침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7천명의 감축인력가운데는 전체 3만4천여명의 정통부 종사원가운데 일반직이 1만1천여명을 점유하고 있으나 일반직은 겨우 4백명 감축(99년 1백명, 2000년 1백명, 2001년이후 2백명)하고 나머지 6천6백명을 기능직공무원가운데서 감축키로 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감축내역은 별첨 참고자료1 참조)

그러나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현업의 실정을 도외시한 채 정부가 구조조정을 생색내기에 급급한 숫자채우기란 인상을 지울 수 없으므로 이처럼 많은 인력을 감축하고서도 우편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우편집배원의 경우 이미 감축된 인력을 정규직 채용을 중단한 채 상시위탁이란 임시직으로 보충함으로써 별첨 참고자료2와 같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력감축을 현업의 실상을 도외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더욱이 우편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영합리화 등 마치 기업에서나 있을법한 논리를 내세워 무차별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음은 잘못이다.

따라서 정부의 인력감축 방침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이전에 재고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1>

1. 정부 인력감축 내용

2001년까지 정부 전부처에서 1만4천8백61명(현 정원의 11.9%)을 감축하고 정보통신부에서 7,035명을 감축키로 함. 정통부 본부에서 35명을 즉시 감축하고 오는 2001년까지 우체국 현업에서 연차적으로 7천명을 감축할 계획임(99년말 1,579명, 2000년 1,674명, 2001년 이후 3,756명).

2. 우체국 및 인원현황

우체국은 일반국 1,556개, 별정우체국(사설) 777개, 우체국분국 441개, 군사우체국 91개, 직할 관서 등 기타 26개로 우편취급소(600여개)를 제외한 총2,891개 관서이며 이에 종사하는 정보통신부 총 정원은 33,421명임. 이 가운데 별정직 12명, 일반직 11,101명이며 기능직이 22,308명으로 체신노조 조합원인 기능직이 66.75%를 점유하고 있음.

3. 현안사항

가. 98년에 정규직 2,000명이 이미 감축됐으나 한 명도 정규직으로 보충하지 않고 일부를 상시위탁, 시간제 등 임시직으로 보충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함은 물론 종사원의 업무량 가중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

나. 우체국의 경우 업무량 과다로 인해 95년부터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 3,000명을 지원 받아 우편업무를 보조케 하고 있으며 99년2월말 현재 2,600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있는바 정규직 인력감축은 모순임.

다. 99년부터 연차적으로 7천명을 우체국에서 감축하려는 것은 정부의 생색내기용이거나 감축인력 숫자 맞추기를 위한 것이지 현실을 감안치 않은 무리한 방침임.

4. 문제점

가. 현업의 업무량 과다로 2,600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지원 받으면서 정규직 인력을 무리하게 감축하는 것은 모순임.

나. 7,000명의 인력을 특별한 기준도 없이 무리하게 감축시키려 하고 있어 우편소통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높으며 감축인력 7,000명 가운데 일반직은 전체정원 11,000여명 가운데 겨우 400명으로 단 5%에도 미치지 못하나 기능직의 경우 23,000명 가운데 30%에 가까운 6,700여명을 감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남.

다. 많은 인력을 감축하다보면 대도시 소규모 우체국과 산간오지, 농어촌 지역의 대다수 적자 우체국을 폐쇄할 수밖에 없어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가 저하됨.

라. 정부의 구조조정은 비효율적인 상층부 조직을 효율화하자는 것이지 현업의 기능인력을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줄이라는 취지는 아님.

<참고자료 2>

집배원 현황 및 상시위탁집배원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1. 집배원 현황

정보통신부는 99년 5월말 현재 총 1만3천4백29명의 집배원중 66.5%인 8천9백32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4천5백17명을 비정규직으로 집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4천5백17명 가운데는 2천3백29명이 별정우체국 수수료집배, 1천9백명이 상시위탁, 2백88명이 특수지 위탁으로 운영된다.

이를 인력감축 이전인 97년말과 비교해 보면 정규직이 9천9백25명에서 9백93명이 감축되고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2천4백65명에서 1백56명이 준 2천3백9명으로 줄었으며 특수지위탁(도급)은 3백5명에서 17명이 감소된 2백88명으로 축소됐다. 대신에 상시위탁(주재)이 7백9명에서 1천1백91명이 늘어난 1천9백명으로 늘어 전체 집배원은 97년말 1만3천4백4명에서 25명이 는 1만3천4백29명이 되었다.

그러나 98년도 신규수요지역 증원 2백명을 감안하면 1백58명이 순감된 셈이며 상시위탁의 기량미숙(1:1.5 적용시 정규직 3백55명순감) 및 신규수요지역 미충원 인력을 감안하며 6백7명이 줄어든 셈이다.

2. 상시위탁집배원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상시위탁집배원을 통한 민간위탁제 운영은 경비절감등 경영개선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책임감, 사명감이 미흡하며 높은 이직율, 무단결근 등 업무의 불연속성, 불안정성으로 대국민 우편서비스 신뢰도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실물경기가 회복되면 단기간에 다수 인력의 퇴직으로 배달업무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며 인력난 가중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임시직 수준에 지나지 않아 정규직 집배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집배업무외 부가업무(예금, 보험모집등 기타 부대업무)실적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정규직의 보수삭감, 감원위협등 근무의욕을 위축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시위탁의 처우개선 요구가 장기화돼 관리직의 조직운영상 부담요인이 상존하고 있는데 99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자동이륜차 보급, 예비군 훈련면제 등 정규직에 버금가는 처우로 개선하고 2000년부터 의료보험에 가입시키고 정규직 집배원 초임의 95% 수준인 월 1백20만원 선으로 처우를 개선토록 추진하고 있어 정규직 채용과 별다른 예산상의 절감효과는 없다. 따라서 상시위탁보다는 정규직으로 집배원을 충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 토론 5:

한국전력기술(주)의 공기업 경영혁신 지침의 부당성

하진수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조직1국장)

Ⅰ. 한국전력기술(주)의 공기업 경영혁신 지침내용

1. 1998.8.10 산업자원부 공문 '전력57300-313'

(1)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2001)

○ 일부 지분매각('99 ~ 2000)

(2) 민영화 이전 강도 높은 구조조정(29.8% 인력감축)

○ 98년 정원 2,198명을 2000년까지 1,543명으로 축소(별정직 제외)

○ 연도별 감축인원

1998년	1999년	2000년	계
325명	220명	110명	655명

(3) 핵심역량위주 사업운영과 비주력분야의 Outsourcing 강화

(4) 합리적인 인사원칙 확립

○ 사장 공모제 실시 및 한전임직원 임명배제

○ 부사장과 경영간부 2인감축

○ 2급이상 계약직 감축('99)

Ⅱ. 공기업 경영혁신 지침의 문제점

1. 단위사업장의 상황을 무시한 일방적인 인원감축 지침

(1) 사업조직으로서 우리회사 인력운영의 특성 무시

○ 관리형 공공기관과 비교

일반적인 관리형 공공기관	한국전력기술 등 사업조직
▷ 인원 - 정원(T/O)으로 인원관리 ▷ 예산 - 정부의 예산지원이 따름	▷ 인원 - 공기업으로서 외형상 정원으로 운영하나 실제 사업량에 따라 적정인원으로 운영 ▷ 예산 - 정부의 예산지원없이 자체적인 사업개발을 통해 수익창출

○ 즉, 한국전력기술(주)와 같은 Engineering 회사는 일반적인 공기업의 정원개념이 아닌 사업량에 의한 사업별 소요 MH로서 인원 및 예산의 규모가 정해지는 것으로서,

○ 한국전력기술(주)는 국내 Engineering 업무가 활성화 되기 시작한 90년 이전부터 당사인력 충원을 최소화하며 필수운영인력으로 운영하고, 핵심 중요기술부분을 제외한 역무에 대해서는 하도급(Outsourcing) 및 외부기술인력을 투입,

탄력적 인력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음

<1990년 ~ 1999년 매출 및 인력비교> (단위:억원, 명)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매출액	840	965	1,123	1,150	1,288	1,684	2,411	2,945	2,778	2,012	2,250
총인력	1,814	2,074	2,287	2,323	2,336	2,582	2,938	3,107	2,803	2,015	1,961
당사인력	1,648	1,760	1,836	1,800	1,758	1,809	1,915	2,224	2,135	1,800	1,789
외부인력	166	314	451	523	578	773	1,023	883	668	215	172
총인력생산성	0.46	0.47	0.49	0.50	0.55	0.65	0.72	0.95	0.99	1.00	1.15
매출증가율	100%	115%	134%	137%	153%	201%	252%	351%	331%	240%	257%
당사인력증가율	100%	107%	111%	109%	107%	110%	116%	135%	130%	109%	108%

주1) 2000년 수치는 7월말 보고된 사업심사분석자료를 근거로 함
주2) 1997년 및 1998년은 사업이관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매출 및 인력의 증가발생

○ 위와 같이 한국전력기술(주)는 이미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 지침이전부터 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당사인력을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단위사업장의 운영특성을 무시하고 총론적 개념에서 접근해야 할 '인원의 30% 감축정책'을 전 공기업에 무조건적인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 결국 사업량에 따라 소요 MH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획예산처의 일방적인 30% 인원감축 지침은, 부족한 MH만큼을 신규채용이든 외부인력을 활용하든 다시 충원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 것으로 전형적인 성과주의 정책일 뿐임

○ 특히 위 Data중 대북경수로사업 매출액은 사업초기의 극소수분만 반영된

것이며 2000년 12월에 착수할 신규원전(고리) 매출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써, 기획예산처의 인원감축 요구가 계속 강행될 시 실제 위 사업을 수행할 인적자원도 없는 상황이며, 대북경수로의 경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기술인력의 분산에 따른 기술축적분 상실 및 기술력 저하로 인하여 안전성이 생명인 원자력발전소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음(대북 경수로 및 신규원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함)

(2) 경제논리에 치우쳐 기술력 해체

○ 한국전력기술(주)는 70년대 에너지 파동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원전건설 및 국산화의 필요에 의해 1975년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임

○ 특히 한국전력기술(주)는 발전소의 기술자립과 국산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 원자력산업 국내 주도 수행기초 마련(영광 3,4호기부터 국내 주계약 실현)
- 후속 원전설계 자체 수행능력 확보
- 기술개발비 집중 투자로 설계기술 조기자립 성공적 추진
  - 설립이후 기술개발 자체 투자비용 : 최소 1000억
  - 기술자립 현황(신기술 도입분을 제외한 기술자립 100%달성)
    원자력설계(가압경수로 1000MWe급) 95%
    화력설계(관류형 500MWe급) 98%

- 국내 원전 산업 기술표준화 및 규격화, 신기술 개발
- 원전산업 국산화율 제고
- 설립당시 국내에 전무하였던 원전설계 전문인력 확보, 양성, 조직화
  - 전문기술인력 : 1,623명(2000.1.1 현재)
    이중 기술사 224명, 기술자격자 929명,

기술사 및 특급기술자 843명
· 전 직원의 기초 및 전문 기술교육과정 연수

등 전문기술 및 기술의 토대가 되고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 유지, 발전 시켜왔음.

○ 이러한 가운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원감축을 위해 기술인력들을 감원한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전력기술(주)가 정책적으로 수행해 왔던 발전소 국산화 및 기술자립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앞에서 서술한 MH개념으로 볼 때 10~20년 기술축적된 인력을 감원시키고 미숙련 기술자를 외부지원형태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술력 상실로 생산성 저하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외부기술인력의 교육등 재투자비용의 발생의 비효율과 안전성이 무시된 부실설계의 우려가 있음

2. 일방적 지침의 이행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생 또는 예상되는 불합리성

(1) 발생된 불합리성

① 인원감축을 위한 하도급사(Outsourcing)급조에 따른 비효율

○ 1998년 한국전력기술(주)는 인원감축을 위하여 하도급사(KOCEN)를 급조하고 이 하도급사로 116명의 인원을 방출하였음.

○ 기획예산처의 Outsourcing의 목적은 효율성 및 경쟁력의 제고였으나, 하도급사의 급조로 인하여 한국전력기술(주)는 오히려 정량적으로는 비용의 상승효과를 발생시켰으며, 정성적으로는 업무 Interface의 단절 및 책임소재 불명확으로

생산성 저하 및 효율악화라는 구조조정의 원취지에 역행하는 사태를 초래하였음. 기획예산처의 성과주의가 낳은 전형적인 비효율 사례임.

- 비용증가 내용

□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한 하도급사인 관계로 직원들의 퇴직유도와 추가 감축을 목표로 잘못된 경영협약 체결
· 관리인력 인건비, 사무실, 집기, 비품 등 간접경비 및 일반관리비 전액지원
· 급여, 복지, 인사 및 근무조건은 한국전력기술(주)와 동일수준
· 이윤보장 5%

□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한 경영협약서와 별개로 운영과정에서 개별 계약의 문제로 5%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공식적으로 추가비용을 15%로 발표하고 있으나, 하도급사인 KOCEN이 이윤 5%에 맞추기 위해 각 종 경비의 부당집행(예, 교육훈련의 명목으로 다수직원의 해외여행 등)을 해왔던 사실과 이 같은 비용의 부당집행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공식자료인 99년 결산보고서상 8%의 이윤을 낸 것으로 볼 때 노동조합은 최소 35%이상의 비용이 더 소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즉, 기존의 시스템으로 100원에 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은 최소 135원의 비용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임.

- 비효율 및 생산성 저하 내용

□ 하도급사 방출대상 해당업무자중 퇴직에 동의하지 않은 13명에 대해 회사는 인원이 부족해 외부기술인력을 활용하면서도 고의로 1년 이상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인력실로 발령을 내어, 대체인력인 외부기술인력대가의 낭비 및 고급기술력의 손실을 초래

□ 하도급사로의 추가 방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전력기술(주)의 직원은 3년간 승급을 보류하며 하도급사 직원은 무더기로 승급을 시켜,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하도급사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킴

☐ DDCC, 품질검사, 전산기운영은 타 기술부문과 Interface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이나 소속이 바뀐 직원들간의 이질감으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성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불만요소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각 분야책임자들이 제기하고 있으나 인원감축을 위한 추가방출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는 오히려 경영협약서 외에 용역을 추가 발주하는 특혜를 줄 계획이며,

특히 품질검사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인용하며 하도급사에서 추가사업인 KEDO사업(대북경수로 사업)의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할 시의 문제점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이 부분에 대해 회사 담당자들의 반대가 있자 하도급사인 KOCEN은 로비를 통해 회사측 고위층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② 한시퇴직후 동일인을 계약직으로 재취업시키는 사태

○ 인원감축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한시퇴직을 유도 직원들의 급여를 갹출하여 21개월치의 보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분야 기술자의 부족으로 다시 정원과 관계없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됨

- 98년 한시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인원 : 약 20명

(2) 대북경수로사업(KEDO사업)수행 불가능

① 대북경수로사업 현황

○ 사업수행기간 : 2000.2 ~ 2008.12(107개월)

○ 주요수행업무

- 1,000MW급 가압경수로 종합설계 및 원자로 계통설계 전반
- 사업주지원 업무 : 사업관리, 건설관리, 구매지원, 품질보증 등

○ 계약서 기준 투입인력

- 총 설계소요인력 : 2,948명/전기간 (연평균 328명)

주1) 한전의 기술지원인력 261명/전기간(연평균 29명은 제외된 인력임)

- 연도별 투입인력 (단위 : %,명)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공정율	8.31	12.42	16.32	16.38	15.84	11.87	7.80	6.00	5.06
누 계	8.31	20.73	37.05	53.43	69.27	81.14	88.94	94.94	100
소요인력	245	366	481	483	467	350	230	177	149
누 계	245	611	1,092	1,575	2,042	2,392	2,622	2,799	2,948

② 대북경수로사업 및 후속사업 설계인력의 절대적 부족

○ 대북경수로사업은 다국적/다단계 사업으로

- 기반 시설이 전무한 북한에 건설됨에 따라 공사용 전력공급설비, 창고 등 발전소 내에 필요한 각종 부대설비의 설계, 건설인력의 주거시설 설계
- 각종 인허가 심사의 복잡 다단계화
- 모든 문서의 영문화
- 북한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 준공시점 중요성으로 인해 국내발전소 설계계약대비 약 10배의 설계 지연 지체상금지불 등으로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타원자력발전소에 비해 특급기술자 및 유경험 기술설계인력의 투입이 요구되고 있으며, 유경험인력의 보유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

○ 또한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후속으로 건설될,
- 신규원전 1, 2호기(2000년내 착수 확정)
- 신규원전 3, 4호기
- 차세대 원전 1, 2호기
- 당진화력 5, 6호기 및 영월화력

설계에 소요되는 인력 또한 기존용역인 영광 5,6호기 및 울진 5,6호기 인력으로 대체하고, 외부위탁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인력부족의 심화가 예상되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경험 기술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현재도 인원이 부족하여 약 400억원에 가까운 하도급 발주와 180여명에 가까운 협력업체 인력을 활용하는 가운데 기획예산처의 지침대로 추가 220여명의 인원을 감축하게 된다면, 대북경수로사업은 거의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수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임.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와 인력조정에 대해 실무선까지 공감대를 가지고 재 인력조정에 들어갔으나(한전의 경우 2000년 2월에 대북경수로 수행인력분으로 101명을 포함 기타 추가사업으로 1,086명을 조정하였음) 9월초 신임 기획예산처장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인력조정 없다'는 발언으로 인하여 현재 조정이 어려운 상태임. 이것이 극명하게 현재의 구조조정지침이 졸속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3) 경영진의 불법행위 유발

① 99년 11월 ~ 2000년 4월까지 불법, 부도덕한 수화력분야 매각계획

○ 경영상 아무런 이유 없이 단순히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 회사의 반을 분리·매각하려는 계획을 시도
- 이 과정에서 매각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이사회 자료에서 경영수치를 왜

곡하는 부도덕성을 보임
- 또한 '영업의 양도, 인수시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위반의 불법자행

○ 노동조합은 즉각 영업양도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사유를 받아들여 영업양도금지 결정을 내림
-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 사유
  · 단체협약의 효력
  · 기술력 분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화력사업의 역할
  · EC체재라는 회사 장기비전 속에서 수화력 사업의 역할

② 현재, 불법 정리해고 계획

○ '정부의 인원감축 지침이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가 된다'고 주장하며 정리해고를 불법으로 추진
- 불법이라는 노조의 지적에 회사는 '그것은 법이 판단할 일'이라며 일단 인원감축을 위해 정리해고 감행예정

○ 현재 회사의 불법 정리해고 계획에 따라 노사분규가 진행중임

○ 정리해고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논함

(4) 형평성을 잃고 있는 공기업 경영혁신 지침 및 낙하산사장의 부도덕성

① 형평성을 잃은 공기업 경영혁신

○ 현재 한국전력기술(주)의 사장은 한국전력공사의 부사장을 역임한 자임. 이

는 '한전임직원 임명배제'라고 지침으로 하달된 내용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임.

○ 단적으로 공공개혁을 이유로 국책사업의 합리적인 인원조정 요청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낙하산인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스스로가 지침을 어기고 있는 상황은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임.

② 낙하산 사장의 부도덕성

○ 정리해고를 계획하면서 낙하산사장은 해고회피 노력의 최우선인 '임원보수 삭감'을 무시하고, 직원들에게는 정부지침 임금가이드 라인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보수에 대해서는 10%의 인상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고,

○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 보수건은 결재를 기피하면서 멀쩡한 사장 접견실에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 개·보수 작업을 하는 등 도덕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임

■ 토론 6:

공공부문 노동조합 4/4분기 투쟁계획

최임석 (정투노련 정책실장)

1. 서론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지난 10월8일(일)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 대회"를 열고 향후 공동투쟁의 단초를 열었다.

금번대회는, 공공부문에서 급작스런 현안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각 조직을 아우르는 현안이 부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만의 노동자가 결집하여 한목소리를 내었는데, 이는 그동안의 정부정책이 대단히 잘못되었고 이에 따라 당해 노동자는 물론 온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공기업 개혁의 평가

1)정부는 공기업구조조정의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98.8 기획위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

①사업분야 : 불필요한 사업 통폐합,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②노동분야 : 인원감축 등 고용조정

③조직분야 : 조직개편 및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경쟁체제 확보
④경영분야 : 회계처리 기준의 개선 및 경영평가제도의 활성화
⑤정부분야 : 정부의 규제 및 간섭완화

2) 위와 같은 정책방향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의 이념 구현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①즉, 공기업을 전공하는 학자뿐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공기업의 존재 의의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공기업 구성원들은 그동안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②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은 공공성은 포기하고 경쟁만을 강조하였으며 그 결과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이전투구 현상을 야기하였다.

③이와 함께 정부의 신자유주의 맹신은 국민들에게 '시장이 천국'이라는 터무니없는 환상만을 심어주고 이에 따라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에 대한 감정적인 거부감을 각인시켜 주었다

3)위 1)의 정책방향 중 ②인원감축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대부분 지지 부진하게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⑤정부분야의 경우 오히려 정부의 통제가 과거정권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 정책방향의 오류를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다.

4)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하는 인원감축 부분도 대부분 하위직 또는 하위기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때 인사개혁을 통한 신진대사라는 정부의 의도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료원 : 7.11 동아일보

구분	'97년말인원	'99년말 감축인원	감축비율
중앙정부	162,000	17,000	11%
지자체	298,000	28,000	9%
공기업	166,000	32,000	19%
출연 · 위탁기관	81,000	16,000	20%

3.향후 공공부문 노조의 투쟁방향

1)양대노총 연대강화

①지난 '97년 12월 국회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대규모 노동자 투쟁을 공동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99년 11월 민주노총의 합법화 이후 양 조직의 연대를 꾸준히 모색하여 왔다.

②금번 대회는 민주노총 합법화 1년만에 양대 노총의 끈끈한 연대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향 후 공공부문의 대정부투쟁에서 노동계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③이에 따라 효과적인 대정부투쟁을 위하여 양대노총의 사안별 · 총괄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④향후 노동계 내부의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노동의 문제는 민중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시민 · 사회단체와의 연대폭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정부정책의 허구성 폭로

시애틀, 프라하, 서울을 잇는 신자유주의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4대부문 구조조정정책이 민족의 이익보다는 가진 자와 힘있는 자의 자

본논리에 충실하였음을 폭로하고, 국민적인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3)사안별 완벽한 승리투쟁 전개

①무분별한 민영화 저지
②관치경영 철폐
③일방적, 획일적 구조조정 저지
④노사자율교섭 쟁취

■ 토론 7:

공공연맹 하반기 연대 투쟁계획

김태일 (공공연맹 부위원장)

가. 민영화는 크게 3단계의 시기구분을 거치면서 추진.

첫째, 70년대 후반 80년대초 국가자본조달능력이 한계에 봉착, 자본축적이 위기에 처하자 사적자본을 동원하기 위해 민영화조치.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해 인수된 부실기업을 새롭게 정리하여 민간자본에 불하함으로써 자본은 막대한 이득을 얻은 반면 노동권이 미확립된 상태에서 취해진 조치로서 노동진영의 이렇다한 저항 없이 시행. 이로 인해 독점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및 재벌기업의 확대발전

둘째, 90년대초 김영삼 정부의 집권과 함께 민간주도경제체제의 주창과 더불어 시행. 이 시기 민영화의 강력한 추진주체는 전경련 등 재벌집단이었음. 이 시기의 특징은 군부독재정권이 청산되기 시작하면서 민영화는 곧 민주화라는 등식으로 민영화추진. 이 시기 민영화에 대한 저항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관료집단과 중소자본가들이었음. 이는 퇴임관료들의 자리보전과 재벌로의 경제력집중이라는 비판여론을 등에 업고 중소자본가들이 민영화의 이권을 얻기 위해 재벌집단과 경쟁. 반면 노동자들은 이렇다한 저항을 조직하지 못하였음

셋째, imf 시기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여 추진. 이시기 의 특징은 세계화 사조와 더불어 국가기간산업마저 민영화 추진.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본격적으로 등장. 한국통신을 비롯한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한전, 철도를 비롯한 한국노총 공공노협이 연대하여 투쟁을 결의하고 있음

나. 공공노협과 공공연맹의 투쟁경과와 투쟁계획

1. 주요 사업 추진 경과

□ 회의 :

△ 집행위원회 : 9. 21. 집행위원회 1차 / 전력노조
9. 26. 집행위원회 2차 / 전력노조
10. 2. 집행위원회 3차 / 철도노조

△ 대표자 간담회 : 9. 23. 대표자 간담회 1차 / 파레스호텔

□ 팀별 사업 추진 내역

△ 집회기획(조직) : - 10. 8 집회 기획 및 실행
(기획, 문화제, 섭외, 물품조달 / 조직)

△ 선전 : - 신문광고 2회(9. 29 / 10. 6)
- 10. 8 집회 포스터 12,000부
- 집회 유인물 20,000부
- 각 일정별 보도자료 등

△ 정책 : - 대정부 요구안 및 해설 자료 작성
- 배포

(참가 조직에 각각 200부 씩 400부, 한나라당·노동부·기예처에 각기자실 포함 30부 씩, 10.8집회 기자단에게 50부 등 배포)

△ 대외협력 : - 정부·정당 접촉 추진, 실행

□ 정부·정당 접촉 경과

△ 기획예산처 :
- 9. 27. 공공노협 대표단 : 기예처장관 면담 (애초 있던 일정임)

- 9. 28. 공공연맹 대표단 : 기예처장관 면담 (")
- 10. 5. 양 집행위원장 : 기예처 박종구 단장 면담

△ 노동부 : - 10. 6. 연대 대표단 : 노동부장관 면담

△ 한나라당 : - 10. 7. 연대 대표단 : 정책위의장(목요상) 면담

△ 민주당 : - 추진중

□ 집회

△ 9. 24.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한통·한전 노조 간부 결의대회>
- 서울역 (→ 명동성당 행진)
- 한통 2,400 + 전력 350명 참여
- 11 : 00 기자회견 진행

△ 10. 8.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 여의도 고수부지
- 참가규모 : 40,000여 명
· 공공노협 : 전력 6,000, 철도 3,000, 도시철도 2,000, 공공건설 400
정투 5,000, 담배 6,000, 공공서비스 2,000 (24,400)
· 공공연맹 : 13,000 (한통 10,000, 기타 3,000)

2. 향후 사업 계획(안)

□ 기 추진중인 사업

△ 대협 : - 민주당 대표 면담

△ 선전 : - 신문광고 : 10. 10. 게재
- 대자보
- 투쟁신문 20만부(10. 18~20 전 조직 배포 투쟁 = 거리선전전)

△ 정책 : - 10. 13.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설명회

△ 총괄 : - 대표자 간담회

□ 향후 사업 관련

△ 10. 8 집회(9월말 이후 1단계 연대투쟁을 집약하고 있음) 평가

- 성공적 : 공공노협 측의 조직 가동력이 돋보였음.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연대의 의지로 이를 극복해냄.
  정부·정당 측에 일정한 압력으로 작용해서 대화 분위기 이끌어 냄
- 문제점 : 집회의 집중점을 확연히 부각시키지 못함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에 제한된 측면 있음)
  양 노총 공공부문의 연대라는 측면을 이벤트화하지 못함.
  (양 노총의 지지 분위기 미흡)

△ 과제
- 쟁점(4대 요구)을 만들어내면서, 정부측의 양보를 강제해 나가야....
  (구체적 성과를 확보해야 - 민영화 / 2001년 예산 / 인력감축 등)
- 이를 위해 정부·정당 접촉을 재조직하고(기예처, 정당 등)
- '개혁협의체' 구성을 강제해 나가야...

(개혁 논의를 조직적으로 담아내고, 정부·정치권을 압박하는 요구로 삼아야)
- 투쟁 대오의 내실화 및 유지·확대 필요

(내실화 - 조합원 교육 등, 확대 - 대국민선전전 및 2차집회, 연대대오 등)

□ 논의·검토 사항

[사업]

△ 10. 16 ~ ① 대자보 사업
② 거리선전전 : - 전 조직 투쟁신문 배포
③ 교육 사업 : - 한통+전력 중심, 거점별 집중 교육, 지구당 방문 등
④ 전 공공부문(25만) 리본패용 :
"민영화·관치경영 분쇄 / 공공서비스사업을 올바르게"

△ 2차 집회 :

△ (2차 집회 이전) 공청회 개최
- 장 소 : 국회
- 토론자 : 정부, 정당, 노조, 시민단체
  ☞ '공공부문 개혁협의체' 구성 문제로 연계해 나가야.....
- 내용 :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개혁 과제
  ☞ 연대투쟁 4대 요구로 논의 집중점 마련

△ (2차 집회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 검토 : 조정 절차 거칠지 여부

△ 11. 30.(가안임) 공공부문 공동 행동의 날
- 최대한 평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 4시간(또는 2시간) 시한부 파업 : 조기 퇴근 → 거점 집결
  ☞ 각 조직별 업무 특성상의 필수요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수서비스인원 잔류 등 개방적 태도로.....
- 구체적 요구안 정리

(민영화 / 2001년 예산 / 인력감축 중단 및 노동시간 단축 등 - 10대 요구 ?)
- 지역 단위의 집회 조직

[요구]

△ 4대 요구를 기본으로 유지

△ 논의를 확보를 위한 요구로, <공공부문 개혁협의체> 구성 제안
- 취지 (생략)
- 틀 : - 정부 4 (기예처 2, 노동부 2)

- 10. 29 2차 집회 (공공노협, 공공연맹 + 금융, 사무 + 전교조, 한교조) - 11. 12. / 11. 19. 양 노총 노동자대회는 양노총 방침대로...(각각, 연합...)
- 11. 5. / 11. 12.(19) 경 양 노총 연합 집회(<전국노동자대회>) ☞ 11. 12. / 11. 19.로 각각 예정된 양 노총의 단독 집회를 통합시켜야.... - 당일 1부 집회 (공공노협, 공공연맹 + 금융, 사무 + 전교조, 한교조) · 집회 규모는 최소 5만 이상을 조직하고, (양 노총 격려사는 본대회에서 소화..... / 공공 연대 단위 중심) · 요구 - 노정교섭, 2001예산 등 부각시켜야.....

- 정당 4 (민주 2, 한나라 2)
- 노조 4 (공공연맹 2, 공공노협 2)
- 시민단체 3(공익적 조정기능 단위는 조금 적게.....)

[총괄]

△ 이를 검토, 결의하기 위한 대표자 간담회(수련회) 조직